

제438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8월19일(수)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
2.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3.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가. 국토교통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 2
2.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3.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2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은혜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21
 1.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 22
 2.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2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3.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22
 - 가. 국토교통부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의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안건은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4조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동 보고와 아울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함께 보고를 받고 이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자료제출 관련해서……

○위원장 유의동 아니, 아직……

○김미애 위원 예.

1.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

2.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3.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가. 국토교통부 소관

(10시05분)

○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전세사기 관련 보고와 국토교통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등의 제안설명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시행된 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만 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에게 주거·금융·세제 지원, 경·공매 지원, 법률·생계 지원 등 약 7만 2000여 건을 지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LH 피해주택 매입정책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7월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만 4657호의 매입 요청을 받아 1만 256호의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여야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 후정산 제도의 도입 기반이 마련되었고 올해 11월 제도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조직·인력·시스템 정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5월부터는 예비임차인을 대상으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피해자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대차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거안정, 교통격차 해소, 국토 안전 강화 및 국토의 균형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여된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을 강화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또한 GTX와 광역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국민의 이동 편의와 교통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으며 지역 핵심 교통망 구축과 노후 산업단지 정비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안전관리와 노후 인프라 정비 등 국토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주행과 UAM 등 모빌리티 사업을 육성하여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5.9조 원으로 이 중 91%인 14.4조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1조 원으로 이 중 95%인 38.9조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총 2554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피해자 지원사업 등에 55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총 70.6조 원을 조성하여 21.6조 원은 임대주택 건설에 지원하고 29.7조 원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 차입금 상환에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 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은 차질 없이 집행하였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부 이월과 불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정책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세입·세출 결산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택토지실장이,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2025년 회계연도 결산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토지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입니다.

2026년 상반기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 피해자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 규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6월 30일까지 총 3만 9669건을 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결정 건수는 23년 하반기 대비 26년 상반기에 약 62%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해자의 약 6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 수원시, 서울 관악구,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지역에 피해자 수가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해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20~30대의 청년층이 약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는 3억 원 이하가 97% 이상이며 피해주택 유형은 다세대가 가장 많았으나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도 상당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경·공매가 종료된 1만 4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 3200만 원이며 경매 배당을 통해 회수한 보증금은 평균 6300만 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기유형 분석 결과입니다.

사기유형은 총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동시진행 및 무자본갭투기는 1만 8500여 건, 비중으로는 47%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선순위권리과다 유형으로 임대인이 선순위근저당 금액을 과다하게 설정한 경우인데 약 6700여 건으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중계약과 같은 계약상 기망 유형은 2700여 건이었고, 신탁사기 및 권한이 없는 자와의 계약과 대항력을 악용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주거, 금융·세제, 경·공매, 법률·생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중이며 지원 실적은 약 7만 2000여 건, 2조 3000억 원 수준입니다.

먼저 주거안정 지원현황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LH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분들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으로 인해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는 즉시 최장 10년간 무상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지원하여 피해자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입 실적은 7월 30일 기준으로는 총 1만 4657호의 매입 요청을 받아서 현재까지 1만 256호를 매입하였습니다.

25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를 매입하였으나 26년은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752호를 매입하여 매입 속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과 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 다가구주택도 지속 매입하여 사각지대를 보완

해 나가는 한편,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약 6300여 호를 지원하였습니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피해회복률은 피해보증금 대비 약 76% 수준이고 전액을 회복한 사례도 85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융 및 세제 지원현황입니다.

피해자가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신규 전세대출을 1100여 건, 기존 전세대출의 저리대환도 4900여 건 지원하였습니다.

구입자금의 경우는 피해자가 기존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저리에 대출을 지원하고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원하고 있으며 미상환 전세대출에 대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하는 특례채무조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공매 지원현황입니다.

1200여 건의 경·공매 매각기일을 유예하여 피해자의 준비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조세채권 안분 8400여 건을 지원하고 경·공매 대행 서비스도 4500여 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률 및 생계 지원현황입니다.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진행한 1500여 건에 대하여 소송 대행 등 포괄적 법률 지원을 하였습니다.

임대인 사망 등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법률조치 대행 및 관리인 예납금을 지원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5900여 건의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8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HUG 직원, 법무사 등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주거·금융·법률 등의 연계 지원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는 모두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고,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과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LH가 신탁사기 주택 매입 결정 시 신탁사가 LH와 우선 협의토록 개선하였고 피해자가 매각기일을 직접 피해주택 매입 희망 시 직접 매입이 가능토록 하는 절차도 신설하였습니다.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우선매수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청구권은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라도 면책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권한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추진현황입니다.

최소한의 보증금 회복보장을 통한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였고 금년 1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

습니다.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인력·조직 정비, 전용 시스템 개발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 관련 세부사항 안내를 위한 피해자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정책홍보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중개사 책임 강화, 반환보증 제도개선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도 지속 보완해 왔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전국 8개 피해지원센터에서 예비임차인 대상 계약 전 등기, 계약서 검토 등을 지원하는 안전계약 컨설팅도 추진 중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지난 3월에 마련하였고 후속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먼저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부처별 상세한 확정일자 등기, 채납정보 등을 연계·분석하여 임차인이 전세거래 위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항력 발생 시기를 악용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개선하고, 공인중개사가 예비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 총규모 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앱 외에 쇼츠, 웹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예방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해자를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 피해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되는 소액임차인 판단 시점을 최초 담보물권 설정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변경하여 소액임차인 보호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지를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행사 등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금년 말 완료 예정인 피해주택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의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9월까지 완료하여 전세계약 위험정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와 협의하여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피해자 단체 등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보고 이후 피해 규모 변화, 지원현황 등을 분석하여 차기 실태조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현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국토교통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세입·세출 결산,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주택도시기금, 재무 결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 재정운용 성과입니다.

첫째,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공동주택을 통해 안정적으로 주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의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 인프라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GTX A·B·C 노선과 주요 도시철도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고 고속도로와 광역철도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이동 편의를 높였습니다. 특히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은 참여 지역 확대와 다자녀 유형 신설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셋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국토 균형발전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 핵심 교통망을 신속히 구축하고 노후산업단지를 정비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넷째, 국민생명 보호를 위해 국토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자동차 안전평가와 화물차 과적단속을 확대하고 노후 인프라 정비와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 수준을 높였습니다.

끝으로 미래산업 육성과 해외진출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율주행과 UAM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해외사업 수주 지원과 다양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국토교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입 및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4조 8059억 원이며 15조 9480억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이 중 90.6%인 14조 446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조 4948억 원이며 주로 납기미도래, 체납자 재력부족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71억 원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체납자 무재산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조 13억 원이며 이 중 38조 884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은 과업기간 부족, 관계기관 협의 지연, 계약·설계 지연 등으로 7913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은 집행잔액 발생,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1조 325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용은 71억 원, 전용은 5218억 원 발생하였으며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예비비 15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010억 원이며 2636억 원을 징수결정 하여 232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중에는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등 경상이전수입이 1887억 원으로 가장 많고 미수납액은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으로 30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4조 2710억 원이며 이 중에서 96.8%인 23조 4880억 원을 집행하였고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29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교통회계 전출금 미집행 등으로 7536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밖에 전용액은 106억 원, 이용액은 48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3조 8156억 원이며 13조 8255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13조 6366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의 상세 내역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조 4120억 원이며 이 중 92.6%인 13조 343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7198억 원이며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절대 공기 부족,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3484억 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전용액은 4870억 원이며 공공요금, 배상금 등 부족에 따라 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회계의 세출결산의 상세 내역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837억 원이며 1조 8317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549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조 2750억 원이며 법정부담금의 납부기한 미도래, 체납자 재력 부족 등이 주원인입니다.

불납결손은 71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1003억 원이며 이 중 96.1%인 2조 18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420억 원은 절대 공기 부족, 계약 지연 등으로 발생하였고 불용액 395억 원은 지급 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전용은 242억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20페이지와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049억 원이며 271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044억 원이며 22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억 원이 이월되었고 1821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3페이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억 원이며 0.8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7억 원이며 118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8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4페이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자 등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책임보험료의 0.5%를 징수하여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와 자동차 사고 후유장애인 재활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조성 실적입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 분담금 등 자체 수입 426억 원, 공자기금 예탁금 회수 등 1541억 원, 여유자금 회수 586억 원 등 2554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운용 실적입니다.

총 운용 규모는 2554억 원으로 피해자 지원 등 민간위탁사업비로 556억 원을 지출하였고 공자기금에 1500억 원을 예탁하고 여유자금으로 497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융자원리금 회수,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되며 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전세·개량자금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조성 실적입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총 70조 5882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민간 융자 회수 등 자체수입으로 17조 9324억 원, 청약저축, 공자기금 예탁 회수 등으로 32조 3454억 원, 국민주택채권으로 15조 1917억 원, 여유자금 회수로 5조 1187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운용 실적입니다.

총 운용 규모는 70조 5882억 원으로 임대주택 건설, 정책금융 지원 등에 21조 6110억 원, 공자기금 예탁 등에 10조 1154억 원, 주택채권·청약저축 차입금 상환에 29조 7288억 원, 여유자금 운용에 9조 1329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30페이지, 재무결산입니다.

2025년 말 국토부의 재정 상태는 SOC 등 자산 731조 5484억 원,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 부채 198조 8871억 원으로 순자산은 532조 6613억 원입니다.

31페이지,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배당 등 수익 10조 708억 원, 사업비 등 비용 33조 1967억 원으로 비용이 수익보다 커서 순비용이 23조 1259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32페이지, 순자산 변동입니다.

25년도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 대비 4조 725억 원이 증가한 532조 661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현금흐름표입니다.

25년 기말의현금이 기초의현금 대비 85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행복청은 행복도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뒷받침할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금강 횡단교량 신설 계획을 마련하였고 BRT 2개 노선을 추가 개통 및 연장하는 등 광역교통망을 확대하였으며 평생교육원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완공하여 교육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수납액은 2983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118억 원, 재산 및 경상이전수입 등 12억 원, 전년도 이월금 85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53억 원을 포함한 3058억 원으로 이 중 57.3%인 1751억 원을 집행하였고 1268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39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은 사업계획 협의가 진행 중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 1167억 원 등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은 3개 완료사업 정산잔액 23억 원을 포함한 건설사업의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총 자산은 2조 397억 원으로 2024년보다 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준공된 국가행정시설 등재로 인해 공공청사를 비롯한 일반유형자산 등이 858억 원 증가하였으며 자산 재평가 및 감가상각 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등에서 78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산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요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5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기업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새만금 지역 간 연결 도로를 착공하였고 전력 공급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보세구역을 새만금 산단 1·2공구에서 5·6공구까지 확대 지정하였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법인세 감면 기한을 25년에서 28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세입 및 세출결산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국유재산 사용료 등으로 예산액 92억 원 대비 18억 원 증가한 11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40억 원 중 95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새만금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사업에서 120억 원을 이월하였고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인해 64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새만금개발청 소관 자산은 1조 5592억 원, 부채는 16억 원으로 순자산은 1조 557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결산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 등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본 보시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국토교통부 국토 분야 세입세출 기금 결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건축문화진흥사업 중에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 내역사업은 1차로 교부한 보조금의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실집행률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에도 2차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교부하여 상당한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 보조금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조금 교부를 통해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보조금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래 쪽입니다.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 예산통제권을 침

해하는 행위이므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분기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간입니다.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사업은 창업 여건이 취약한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보육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사한 취지의 창업지원센터와 동일한 장소를 임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운영비성 경비를 절감하고 향후 국토교통 분야에 특화된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사업 내용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출연사업에 기반침하 안전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여 기반을 탐사하고 공동을 복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공동의 약 28%가 복구되지 않고 있고 미복구 공동의 상당수가 즉시 또는 3개월 이내에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 긴급등급 또는 우선등급에 해당합니다. 미복구 공동의 조속한 복구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발견되는 공동에 대해서도 지하안전점검 표준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간 내에 적절한 복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쪽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사업은 지난 1년간 실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취지를 고려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규 사업장에 대한 우선적 지원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균형 있는 자금 공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및 관리사업의 경우에는 반환금 및 손실금 비목으로 편성된 예산의 약 82%가 불용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환급금 및 조기 납부자 환급금을 적시에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불용하거나 정산 시점을 지연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반복적인 국고 지급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후 적정 규모의 반환금 및 손실금 예산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사업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한 반면에 대학 지원, 공동교육 등 고유사업은 축소되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실제 운영 여건에 맞게 인건비를 산정하고 법인의 고유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번입니다.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및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은 연내에 실집행 가능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보조금이 교부되어 실집행이 부진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보조금 교부 전에 선행절차 이행 여부와 실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1차관 소관 및 행복청, 새만금청 소관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일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분야 결산 등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일 전문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분야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9쪽입니다.

우선 예산집행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공단 출연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사무 수탁 시 사무편람 구비의무에도 불구하고 90여 개의 국가 수탁사무 중 절반가량의 사무를 사무편람 없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공교통본부 인건비 사업과 관련하여 항공교통본부는 청사 용벽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부족을 이유로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인건비를 자체 이용하였으므로 향후 관련 법령과 예산집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가운데 부분입니다—자율자동차 상용화 사업 중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 내역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가 1곳에 불과하므로 농어촌 지자체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사업자 선정 시 농어촌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첨단도로교통체계 사업 중 C-ITS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차량 자체의 센서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국내 모든 도로에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C-ITS를 구축하는 ITS 기본계획 2030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이미 구축이 완료된 C-ITS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가운데 부분입니다—위험도로 개선 사업은 2025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52%에 그치는 등 집행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위임국도 사업의 집행률은 33%에 불과하므로 사업 전반의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위임국도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자금 및 학자금(융자) 사업은 실집행률이 약 52%로 저조하므로 사업의 지원 인원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생활자금 무이자대출의 지원금액을 인상하거나 대학생 등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으로……

○김미애 위원 의사진행발언……

○김은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이것만 마무리 짓고.

○김은혜 위원 예.

○위원장 유의동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는 신청자에 한하여 하는 것으로 주질의를 마치신 분들께 행정실에서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결산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충실한 소위자료 작성을 위해 결산 관련 서면질의가 있으신 분은 주질의 종료 전까지 준비가 되시는 대로 행정실로 서면질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 시간인데요.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자료제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오늘 회의 일주일 앞서서 지난 12일에 25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국토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구 당일 제출된 것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 1건 뿐이고 14일에 10건 그리고 7건은 회의 전날인 어제 오후와 저녁 늦게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7건도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전날 도착했거나 아직 오지 않은 자료가 14건, 절반이 넘습니다. 전날 받은 자료는 검토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비점이 확인되어도 보완을 요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산 심사의 기본 절차가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출된 자료 역시 온전하지 않습니다. 14일 답변이 온 10개 사업은 세부적으로 38건의 개별 자료를 요구한 건데 그중 11건이 빠져 있습니다.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 회의자료, 안전 및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이행점검표,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월별 주택 인허가·착공·준공·미분양 실적,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실적과 기금 투입·회수 전망, 청약

저축 이탈 및 국민주택채권 발행 감소 대응방안 등 결산 심사의 핵심 사안이 모두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 내용도 문제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부동산 대책별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과 금액을 대응시켜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국토부는 ‘공급대책 관련 2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조 6483억 원 및 주택도시기금 38조 151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 한 줄로 보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대책별 사업과 금액을 확인하겠다는 요구에 이런 식의 답변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형해화시키는 겁니다.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쟁점 없는 사업은 당일 제출되고 쟁점이 있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또 중요한 사안일수록 지연하거나 빠지거나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미제출 7개 사업과 누락된 개별자료 11건 그리고 부실하게 제출된 항목까지 8월 12일 요구한 25개 사업 자료를 오늘 오후 속개할 때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위원장님도 다시 한번 제출을 촉구해 주시고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동** 국회의 본령이 예산 세우고 또 사용한 예산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유의동** 그러니까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김은혜 위원님.

○**김은혜 위원** 경기도 성남 분당을의 김은혜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의사일정 변경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 분들에 대한 보도에 보면 20일 본회의에 용산공원 특별법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있을 곳은 본회의가 아니라 국토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국토위원들, 그때 보셨습시다만 지난 4월 기억하시지요? 이 용산공원 특별법안이 소위의 논의를 충분히 마무리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이 법은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배한 소지가 크기 때문에 숙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중간에 드러내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용산 미군 반환부지는 국가공원으로 돼야 된다는 것,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이후 계속돼 온 외국군대 주둔지를 우리가 국가공원이라는 역사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자, 그래서 민족적 자부심을 회복하자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야 모든 정부에서 보수·진보 막론하고 이러한 상징성을 고려해서 용산공원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제 용산공원에 청년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이 땅을 미래세대에 남기기 위한 국가자산이라는 데에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닥치고 공급이라고 하더니 이제 역사적 의미도 닥치라는 건지 묻고 싶

습니다.

용산공원을 특히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대선 공약마저 이제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께서 납득하라고 하실 겁니까? 또한 야당 시절의 민주당이 토양 오염을 이유로 공원 단순 임시개방조차 안 된다고 반대하셨는데 이제는 갑자기 청년들 그냥 살게 하겠다고 합니다.

국회법 제91조는 중대한 사전변경 그리고 의사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인정될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번안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용산공원 법안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는 이 공원을 국민께 개방해야 된다는 기본 이념과 입법 취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바 명백한 의사결정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우리 여야 국토위원들이, 우리 국회가 국민께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그리고 번안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동** 이 부분은요 이 자리에서 오늘 결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해야 되니까 양당 간사들께서 따로 협의를 하셔서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정일영 위원** 정일영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변경, 물론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다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민들이나 다른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혼선을 일으키실 것 같아서 이것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용산공원을 개발해서 주택 공급을 한다는 그 내용하고는 저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합시설조성지구에 관한 법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돼서 본회의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용산공원 본체에 관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안입니다. 본체 외곽에 있는 캠프 김·유엔사·수송부 부지가 관련되는 게 복합시설조성지구이고 지금 어린이정원, 용산공원 이것은 본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동**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토론하지 않고요. 양당 간사들께서 적절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표에 따라 먼저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장관님, 우리 청년들이 지금 주거난에,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강력히 청년주택들의 공급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남근 위원 이번 8·13 공급대책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주택공급 정책 중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남근 위원 다만 언론에서는 주로 금융정책 부분만 많이 부각이 되면서 청년주택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어포더블(affordable)이라는 주택정책의 목표가 있어요.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남근 위원 우리로 한다면 부담 가능한, 적절한 가격의 이런 주택이 공급돼야 된다 그런 취지인데요. 국토부의 주택정책의 목표 중에서도 이러한 정책 목표가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남근 위원 그래서 모든 걸 다 시중의 시가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청년처럼 아직은 소득이 많이 부족한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담 가능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남근 위원 특히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실태조사에 의하게 되면 자기 소득의 한 25%에서 30% 이상을 주거비에 쓰는, 주거 빈곤층이 되는 거지요. 이런 청년들이 청년층의 한 절반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청년들이 지금 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남근 위원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여러 정책 중에 내집마련 정책도 있는데 예를 들면 3기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아직 분양가상한제 같은 게 남아 있어서 주변 시세 보다는 좀 더 부담 가능한 그런 공급이 가능하고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택지가 마련되기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일부 공공택지나 공공 도심복합개발사업들 이런 데서는 지분적립형이라 그래서 청년들이 초기에 매입을 할 때 있어서 부담들을 크게 낮춰주는 이런 공급정책들도 추진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남근 위원 그래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남근 위원 청년들의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도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낮은 임대료의 임대주택들을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8.13 대책에서도 공공택지나 공공재개발이나 신축매입임대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도 공급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남근 위원 이번에 특히 보편형 공공임대라고 그래서 공공임대하게 되면 굉장히 질이 낮은 주택이다라는 선입관들이 있게 되는데 굉장히 우수한 입지에 품질이 좋은 그런 공공임대도 지금 공급할 예정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남근 위원** 지분적립형 보게 되면 서구 유럽의 대도시 지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정책인데 초기에 한 25% 정도만 부담을 하면 한 20년 동안 매년 5년마다 계속 나누어서 대금을 낼 수 있어서 초기에 할 때 큰 빚을 내 가지고 그 빚에 허덕이면서 살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분양정책 중의 하나인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남근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어포더블(affordable)한 청년주택들을 어디에 공급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공공택지나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 청사, 노후 학교, 이런 데라든가 아니면 영구임대주택 고밀도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토지를 통해 가지고 공급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남근 위원** 그래서 용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결국은 용산이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어포더블한 주택들을, 부담 가능한 주택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용산 관련해서는 여러 얘기가 섞여 있는데 먼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공공청년주택들을 공급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도 이견이 없는 거지요? 그게 6000이나, 1만이나, 8000이나 지금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공급하자는 거에 이견이 없는 거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김남근 위원** 또 용산공원에 대해서도 전부를 주택으로 공급해야 되느냐 이거는 좀 논의를 앞으로 많이 해 봐야 되겠지만 그중에 공원 용도로서 좀 부적합하거나 이런 데들은 일부 개발을 해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주택용지로 공급하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남근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장이 좀 문제이신 것 같아요. 서울시장께서는 자꾸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견 안 된다 저견 된다 막 이렇게 상급기관처럼 하는데 서울시가 청년주택 어떻게 공급하겠다,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지 못하고요. 일단 내일……

○**김남근 위원** 저희가 알아보니까 오세훈 시장은 계속 정비사업, 정비사업 하는데 정비사업은 일단 조합원들 3분의 2 정도, 4분의 3 정도가 공급돼야 되고 일반분양이 15억, 20억 하는데 그게 청년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청년주택 공급은 서울에서 추진이 필요한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남근 위원** 그래서 각별하게 청년주택에 대해서 8.13 대책의 내용들을 조금 요약한 그런 정책발표를 따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남근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장님, 잠깐 제가 김남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청년주택에 대한 비전과 대안이 좀 특화돼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에게 나왔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뛰어넘어서 청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수요자 입장에서 과연 무엇을 원하는 건지에 대한 매우 디테일한 내용을 포함해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획을, 지금 타운홀 미팅 같은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려고요.

용산공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논의가 확대돼서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지역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전해야 될 녹지에 손대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린벨트 내의 지역에서 그린벨트가 일정하게 훼손되어서 그린벨트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하고 있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공급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려고요.

○위원장 유의동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용산공원 문제도 그런 취지에서 전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문제가 아니라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주택을, 특히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게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거고 이걸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숙의하는 과정과 맞물려서, 공론화 과정과 맞물려서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부산 해운대율의 김미애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용산공원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장관님이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고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특히 서울시민들은 의아해 하는 겁니다.

아까 김은혜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2007년 7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법을 보세요. 1조, 2조, 4조에 보면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 외 용도변경이나 매각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저희들은, 후손들은 살려야 되고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공원녹지를 왜 함부로 줄이겠다는 겁니까?

게다가 이걸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숙의가 필요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김미애 위원** 특히 대체 어떤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지금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김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용산공원 문제에 대해서 숙의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기존 물량의 착공과 민간 정비 규제 합리화가 우선입니다. 오염 정화, 특별법 개정부터 거쳐야 하는, 공원을 언제 착공할지 장관님도 장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민 공감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적극 공감합니다.

○**김미애 위원** 국토부가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착공의 90%를 민간이 담당했고 민간 공급이 회복되지 않으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미애 위원** 그런데 8.13 대책에서 입지를 공개한 신규 공공주택 2만 7000호 가운데 서울은 강서구 염창공원 1000호가 전부입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일단 공개된 건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진단은 민간인데 처방은 공공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신뢰를 못 하는 겁니다. 장관님, 이렇게 해서 서울 집값 잡을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저희는 민간을 도외시하고 공공 중심으로 처방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김미애 위원**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업무보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실제 민간과 공공이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지요. 지난주에도 업무보고에서 장관께서는 민간 중심 정비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 이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공급정책의 중심에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명확히 포함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두 트랙으로 하는 겁니다. 공공과 민간이라고 하는 두 트랙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포함돼야 맞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는 대부분 서울 외곽에 있고 서울 도심에는 민간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어요.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472개소 49만 7000호입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을 관리하는 곳인 253개소 31만 호는 기존 주택보다 8만 7000호가 늘어나는 순증 공급입니다. 최근 3년간 실제 준공된 59개소도 2만 호, 36.4%가 순증됐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정확한 데이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대충은 아실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미애 위원 그래서 253개 정비구역에서 기존 주택보다 8만 7000호를 더 공급할 수 있는데 규제가 사업을 막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민간 재개발·재건축이 핵심이라는 건 동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서울시장이 10개 요구한 것에 대해서 8개는 다 동의해서 수용했습니다. 2개가 수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쟁점이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논의를 이어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이때 용적률을 1.3배 완화하는 겁니다. 민간도 당연히 포함해야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동의할 수 없고요.

○김미애 위원 왜 동의를 못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희 정부에서는 민간 용적률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공론화시켜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미애 위원 아니, 이것도 정부가 먼저 추진하겠다고 하고 국회가 이어받아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공공만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은 반드시 공급 확대는 민간·공공이 함께 가야 된다면데요. 그런데 왜 공공은 맞고 민간은 안 된다고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용적률을 높이는 문제에 있어서, 용적률을 높이는 것만이 민간 재개발 사업을 잘하고 있다라고 등치시키는 건 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김미애 위원 제가 등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3년간 한시법이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용적률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위원님, 다음 추가질의시간 이용해 주시고요.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은혜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1시05분)

○위원장 유의동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혜 위원께서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1조에 따르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 1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서면동의서에 동의자 외 찬성자가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71조 및 제77조에 따라 김은혜 위원의 동의대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동의의 경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의가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으세요? 이의가 있으신 거지요?

○복기왕 위원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유의동 아니, 그러니까 그 동의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있어요?

○복기왕 위원 그 부분 이의가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셔야 되니까……

○위원장 유의동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7인 반대 14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

2.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3.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가. 국토교통부 소관

(11시07분)

○위원장 유의동 예정된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인천 서구병 노을이 아름다운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장관님,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가 그리고 정부가 주도해서 공급하는 주택은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까?

집이 있는 사람입니까, 집이 없는 사람입니까? 쉬운 질문인데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민 모두에게 가는 게 가능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경종 위원 우선적으로는 집 있는 사람입니까, 집 없는 사람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가야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경종 위원 보통 그게 우선순위겠지요.

그러면 보통 집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청년세대일 확률이 높고 데이터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모경종 위원 그런데 이 청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다 똑같은 청년이 아닙니다.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집을 사야 하는, 자산 형성의 목적이 포함되어 집을 사야 하는 신혼부부 같은 가정을 꾸리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집을 더 늘려야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 다 세분화시켜서 국토부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요, 주택이 공급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청년들,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가 감당할 수 있어야지 그게 안 된다면 이 공급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11일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결혼 페널티 문제를 지적을 했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이번 대책에 정책대출 소득요건 합리화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국토부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결혼 페널티를 이야기했더니 신혼기간만 가져왔더라고요.

장관님, 결혼생활 하시고 계시지만 결혼이라는 게 신혼 시절만 결혼생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출산하고 육아하고 이 모든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청년세대와 겹치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지요. 그러면 출산 페널티도 있을 수 있고 육아 페널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하나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하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원플러스 원을 더 가져오는 그런 국토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청약 조건과 대출 소득요건이 맞물리지 않으면 특별공급에 당첨되고도 입주하지 못하는 점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8월 13일에 주택 신속 공급 방안 발표해 주신 거 잘 봤습니다. 공공택지의 비주택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겠다, 2030년까지 3만 호를 착공하겠다, 상가 공실이 늘고 비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 어느 정도 맞는 전략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용지를 전환한다라는 이야기만 있지 늘어나는 기반시설의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환대상이 된 도시지원시설용지는 도시를 계획하는 단계, 신도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 계획해 놓은 부지가 대다수입니다. 이를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하면 그 지구 주민이 장래에 누려야 될 자족기능 그다음에 편의 이런 걸 다 축소시키고 감소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준공 이후의 그 내용들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모경종 위원 이번에 세 곳을 이 파트로 공개를 했는데 그중 한 군데가 제가 지역구

로 두고 있는 인천 검단입니다. 2206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과밀학급 문제로 매우 심각한 지역이에요.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제가 보니까 검단 지역의 신도시 지역 학생 수가 2만 4000명, 2030년에는 3만 3000명으로 계속 증가하는데 관내 중학교 7개, 고등학교 6개가 학급당 거의 30명에 육박하는 과밀학급 문제를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늘린다고 하는 게 이게 좀 어불성설 아닌가 싶고요.

인천교육청이 애초에 학생유발률을 0.2명으로 잡았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0.4명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2배가 더 들어와서 학생들의 교육의 질도 떨어져, 학생들과 함께 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떨어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청년들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곳에 이음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애초에 48학급을 예정했는데 지금 76학급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래서 이런 지점을 같이 동시에 또는 선결과제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교통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라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서울 5호선 문제도 마찬가지고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교통 문제가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대책을 한다고 한들 주민 수용성 떨어지고요,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들어간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도시를 만들 때 예상한 게 있고 또 일정하게 주택 공급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실제 LH와 협력해서 또 교육청이나 지자체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검단 같은 경우는 그 구체적인 지역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또 구체적으로 내용을 주시면 그걸 같이 국토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동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위원 장관님,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뉴홈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 주택담보대출 관련 공고문 관련 말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께서 그때 ‘고정금리로 돼 있다는 자료가 없다. 저희는 고정금리로 공고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국토부에 공고문을 요청드렸는데 주지 않으셔서 가지고요, 의원실에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언론에도 있고 청약자분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공고문입니다. ‘연 1.9~3%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집값의 80%까지 지원한다’. 장관님 이 공고문 기억 안 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 밑에 내용은 보셨나요?

○김은혜 위원 지금 휴대폰 혹은 금융상품 대출처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약속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위원님, 그 내용에 추가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라는 기본개념처럼 딱 그걸로 하겠다가 아니라 일정한 변경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당시의 대출금리로 한다는 부대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 보셨나요?

○**김은혜 위원** 장관님, 자신 있었으면 그 부대조항 저희한테 주셨어야지요. 그러면 왜 공고문을 저희한테 안 주십니까?

아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대통령 공약도 하루아침에 뒤집으니까 그 밑에 계신 장관이나 공직자분들은 분양 사기 정도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뭉개고 가셔도 되는 건가요? 국민들이 전 재산을 걸고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선택한 내 집 마련 꿈입니다.

뉴홈 피해자분들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의원실에 연락을 주셔서 장관님께 반드시 전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22년, 24년 사전청약 공고문에 정확히 1.9~3% 고정금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무책임하다 생각하시고 저희 사전청약자들은 참담한 절망감에 있습니다. 장관님이 웃으면서 말 한마디로 바꿀 수 있을 만큼 국가의 약속이 가볍습니까?’ 청약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현 정부 국토부의 말 바꾸기는 불안감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하루하루 피가 말라 가는데 국민들에게 피눈물 나게 만든 발언이라 생각해서 공개 사과와 발언 정정을 요구합니다’라고 저희에게 메시지를 보내 주셨어요.

장관님, 저는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이 공고문대로 뉴홈 나눔형 전용 모기지 상품 원안 그대로 이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게 있으면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아니, 저는 책임을 여쭙본 게 아니고요. 원안 그대로 이행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원안대로 하자면 복잡해집니다. 정부가……

○**김은혜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공고를 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공고문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타 지원 대상, 금리 등은 시장 여건, 시장 금리……

○**김은혜 위원** 제 질문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을 정부가 깡그리 무시하니까 정부의 정책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정부도 잘못했지만 ‘깡그리 무시한다’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김은혜 위원** 그러면 무슨 잘못 하셨어요? 정부가 무슨 잘못 하셨습니까? 어떤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정부가 이 기타 사항을 너무 작게, 명확하게 클라이언트가 볼 수 있도록 제대로 하지 못한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김은혜 위원** 국민이 시력이 나쁜 게, 국민 잘못이군요. 시력이 나쁘다고 국민 탓하는 겁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시력 문제로 가지 마시고요.

○김은혜 위원 아니, 그러면 작게 만든 걸…… 지금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시면 어느 청약자분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것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문안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문안이라고요.

○김은혜 위원 남 정부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정부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남 정부 탓하실 겁니까? 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탓을 하는 게 아니고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은혜 위원 다음 주 화요일 날 피해자분들하고 간담회 하시잖아요, 장관님,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그때 원안이, 국토부 공식 약속 문서를 피해자 앞에서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김은혜 위원 지금 저한테 읽어 주시는 것 내용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숙지하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김은혜 위원 청약자 분들도 피눈물 나게 들으셨을 거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자꾸 일부분을 침소봉대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자면 저는 다음 주에 만나서 클라이언트들에게 분명히 사과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할 생각입니다. 그 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김은혜 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글자를 키워서 해결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지요. 글자를 작게 쓴 공고문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겠지요.

○김은혜 위원 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읽어 드릴까요, 작게 써진 기타에 대해서?

○김은혜 위원 저희한테 진작……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마치 ‘정부가 고정금리로 공고해 놓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면 공고 자체를 하지 마셨어야지요.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저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장관은 국민 입장에서 바로잡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이때까지 그렇게 사셨던 분이 라고 저는 믿고 있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리고 이번 사안도 그렇게 용기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용기가 없다면 장관님 그 직에 계속 있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장님, 질의 과정에서 중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의동 차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진행을 하시지요.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LH 사장님 발언대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LH는 분양 토지와 분양 주택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임대사업 손실을 보완하는 체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025년 결산을 한번 보실게요.

LH의 총 부채가 173조 6570억 맞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문정복 위원 이것 다양한 금융의, 그러니까 제도적 금융이 다 다르겠지만 대략 연간 이자가 얼마나 나갑니까? 모르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예, 꽤 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문정복 위원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자가 나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LH 사업 부문별 매출 총 이익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2025년도에 임대사업으로 마이너스된 손실금액이 2조 7383억입니다. 하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예.

○문정복 위원 올해 2026년도를 전망해 보니까 대략 한 3조 4000억 정도로 추정이 돼요. 맞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예.

○문정복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LH의 부채 증가 이유가 임대사업에서 나오는 손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석도 맞는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통합공공임대 정책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거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확대 정책에 따라서 LH의 사업 손실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건데 그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부채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LH가 이 부채를 감당하고 이자를 내는 그런 형태로 공공기관을 운영하실 건지 묻고 있는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정부 지원이 조금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조금 느는 게 아니라 많이 늘어야 되겠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이것 아주 편하게, 제가 아주 보기 좋게 정리를 해 놔줍니다. 제일 대표적인 공급평형 20평을 대상으로 제가 해 본 겁니다. 호당, 한 채 짓는 데 정부 기준으로 하면 2억 1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맞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예.

○**문정복 위원** 그런데 실제 사업비를 보면 어떠냐 하면 한 채 짓는 데 3억 6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제시한 기준 가격과 실제 사업비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채당 짓는 데 LH가 20평형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손실이 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표에 있는 대로……

○**문정복 위원** 표에 있는 대로 나지요. 지으면 대략 한 채당 LH는 2억 8000 정도의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2억 8000은 전부 LH의 부채로 잡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주구장창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랬을 때, 우리가 통합공공임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을 때 LH의 재정 손실을 어떻게 할 건지 장관님께서는 이에 대한, 통합공공임대 확충 방안에 따른 LH의 손실 보전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에 대한 대안이 있으실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LH 부채 문제뿐만이 아니고 저희 공공기관에 부채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아니요, 아니요.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LH 부채만 얘기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그런 부채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LH가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정복 위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래서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최소한의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되고……

○**문정복 위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재정 지출을 각오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모색해야 된다……

○**문정복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공임대 확대 정책을 하실 때 국가가 LH에게 떠맡기지 않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 지겠다라고 하는 기본 방침은 서 계신 걸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렇습니다.

○**문정복 위원** 다행이고요.

그러면 추가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호수와 여기에 따르는 정부의 재정 부담금에 대해서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시면, 추계해 놓은 게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는 그런 재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당국, 예산당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토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고요.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방향은 서 계신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렇지요.

○문정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장관님, 요즘 용산공원 때문에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내일 안 그래도 오세훈 시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용산공원은 대도심의 대규모 마지막 녹지 공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고 우리가 외국의 도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뉴욕이나 파리 이런 데에 저희가 부러워하는 것이 센트럴파크나 하이드파크 이런 것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나 용산구청 그리고 또 서울의 많은 시민들, 심지어는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 도심 녹지는 마지막 미래세대를 위해서 남겨 두어야 된다고, 시민들의 삶의 질과 또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다라고 지금 정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책에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은 다른 지역에, 주택 공급도 중요한데 다른 지역에 지을 수도 있지만 사라진 녹지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그러면 지금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재고하실 생각이 있으신다는 거네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김정재 위원 왜냐하면 며칠 전에 장관님께서 공원 전체를 후보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서 이 발언의 파장이 일파만파 퍼져 가고 있는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그러면 간단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자들 질문의 핵심이 용산 어린이정원에 주택을 짓느냐 마느냐라고 자꾸 접근해서 그게 아니다……

○김정재 위원 어린이공원보다는 더 확대할 수 있다 그 말이네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용산공원의 녹지를 축소해 버리는 패턴이 아니라 이미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에서 뭔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김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충분히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쭙보겠습니다.

아까 경미한 녹지기능을 상실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용산공원 특별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본체부지, 지금 본체부지 아닙니까? 본체부지는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주택 건설을 막는 핵심 조항입니다. 여기에 주택

짓지 마라, 여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정권이 어떤 것으로 바뀌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본채부지 전체는 반드시 용산공원으로 하라 이런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좀 바꿔서 일부분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생각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제가 좀……

○김정재 위원 간단히, 간단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여기에 장교 숙소도 있고요, 군인 아파트도 있고 구 방사청 부지도 있고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그러면 여쭙보겠습니다.

용산공원조성지구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소위 복합개발 할 수 있는 지구는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용산공원조성지구입니다. 이게 지금 면적 변경이, 공원 이외에 다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변경할 수 있는 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김정재 위원 장관님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300만㎡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0만㎡. 그런데 이 법에는 시행령에 최소한,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긴데요, 3000㎡입니다. 정말 경미한 겁니다. 이것 이외에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저런 여차저차한 이유로 하겠다는 것, 아까 말한 시설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공원입니다, 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도심 녹지 공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신다고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그다음에 시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국립중앙박물관도 있는데요,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훼손한 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올렸는데, 이게 물론 과장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 루브르박물관, 바티칸성당 이후로 3위로 전 세계에서 많이 방문하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 경관이 해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꼭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법 개정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것은 확실한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공공주택 공급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공급 수단입니다. 지금 용적률 확대하는 것,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 정도 유예하는 것 그리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좀 낮춰 달라, 30% 완화해 달라는 것이 서울시의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충분히 늘려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일부분 받아들인 것은, 지금 정부가 서울시의 규제 완화를 일부는 반영시켰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 미반영된 부분도 한 번 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용인시병 부승찬입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매입임대주택 공실률이 수도권에 3%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3% 정도 된다고 했고 그것은 입지의 문제, 살고 싶지 않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질의를 이어 갈 텐데요.

슬라이드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

이게 LH 든든전세주택이에요. 2024년 6월에 2년간 2만 5000호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 목표치가 16.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임대 지원으로 국토부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지금 폐지됐지요. 이게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보는 바람에 결국에 이것은 폐지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51% 정도 달성하고 25년도 예산은 불용된 상황입니다.

다음 장.

그다음에 LH에서 매입임대주택을 하고 있는데 매입임대주택이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30년까지 14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9·7 대책에 보면 7만 호를 2년 안에, 26~27년 안에 착공하겠다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급하는 것 보면요, 매입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턱없이 부족해요. 24년도에 3만 호 정도를 매입했는데 이때 당시를 보면 이때 당시에는 공사비 연동형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들었고 다시 감정평가형으로 바꾸니까 26년도 6월 기준으로 4800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신속공급대책으로 내세운 게 현 추세로는 가능하냐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서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부승찬 위원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용서고속도로 아시지요,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부승찬 위원 지금 보면요 국토부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20억 정도, 21년 60억에 비해서 배 이상 높아졌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2용서고속도로를 9.7km 지하화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것?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부승찬 위원 이게 손실에 따른 보조금을 국토부가 보전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2용서고속도로가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민간기업으로서 제안서를 접수받으면 한 달 안에 적격성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개월을 끌었어요. 36년 7월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20개월을 끌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제안서 접수 후에 한 달 안에 KDI로부터 적격성 조사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그런데 20개월이나 지연했어요. 그러면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손실에 따른 보조금은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표에서도 보시겠지만 보조금 증가율이 5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0개월이라 하면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2년을 상정하더라도 200억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사업 지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 때문에. 기본계획을 국토부가 따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20개월이 지연됐으니.

(유의동 위원장, 정동만 간사와 사회교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제안서 접수 3개월, 이것도 2개월이 지연됐지만 3개월 만에 적격성조사 평가를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감사를 실시하든 뭐 하든 간에 결국은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 지연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것에 따른 조치계획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승찬 위원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현재 용서고속도로 관련해서 개량운영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 민자사업과는 약간 다른 방식들이 결합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획예산처와 그다음에 KDI와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졌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시간이 늦어진 과정에 대한 설명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조금 동의를 못 하는 게요 19년도에 현대건설하고 어찌 됐든 국토부하고 4년간 협의를 계속해 왔고요.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자체도 개량운영형 사업이 최초로 시행되다 보니 3개월 만에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처 간 이견이 있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 규정된 그런 시한을 넘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법·규정이 다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정하고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문제가 되는 것을 다 마무리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20개월 동안 국토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거나 내지는 어떤 국토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런 내용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진행한 후에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제가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동만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부승찬 위원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20개월을 사업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법·규정에 명시된 대로 가는 게 그러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고 규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위법……

○부승찬 위원 아무리 새로운 사업이라 할지라도 왜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는 3개월 만에 제안서 조사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20개월이 지연되면서 혈세를 낭비하나 이거예요. 사업이 지연될수록 지속적으로 혈세는 낭비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동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동만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김종양 위원 안녕하십니까?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위원입니다.

장관님, 며칠 전에 여당 당대표 선출이 있었지요? 여당 당대표 선출 있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종양 위원 김민석 전 총리가 당선되었지요. 이번 선거에서 김민석 전 총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지금 답변할 상황이……

○김종양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종양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많은 전문가와 언론에서는 800조 호남 메가프로젝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언론에서 한겨레도 그랬고 조선일보도 저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장관님, 호남 800조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큰 걸림돌이나 장애물은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많이 있지요. 전력도 문제고 용수도 문제고 그다음에 군공항이니까 공항 이전을 해야 되니까 안보도 문제고 그리고 또 미군 공여부지 환수 문제 등으로 인해 가

지고 외교도 문제고 등등 아주 많은 걸림돌이 있지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많은 큰 문제점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속도전을 넘어서 지금 전격전으로 이 사안을 해결해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장관님,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종양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호남 반도체 관련 국가산단은 이렇게 범정부적으로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그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내자 이렇게 하면서 추진하는데 왜 반도체 못지않게 중요한 방산·원전 융합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하고 지연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엇그제 그랬잖아요, 호남 반도체산단은 3년 후에 2029년도 1차 공장을 완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착공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방산·원전 국가첨단산업단 창원에 후보지로 선정된 것 지금 2년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게 토양오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관련해서 저희들이 1차에서 열일곱 군데, 2차에서 스물네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110만 평에서 광산 나왔다 그래 가지고 탄광 관련된 부지 제외시키고 70만 평에 하겠다 그러면서 70만 평에 저렇게……

한번 보세요. 1차에 17개, 2차에 24개 공을 뚫어 가지고 토양오염 여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광산으로 인해 가지고 토양오염된 곳은 한 곳도 나오지 않고요. 저 17개·24개, 사십몇 개 중에서, 41개 중에서 공장 부지로 부적합한 곳이 1개 공이 나왔습니다. 그 공이 토양오염에서 나온 게 아니고 기반암 자연석에서 그 유해 광물질이 나왔다, 공장 부지로 하기에 조금 초과되는 정도의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1·2차에 거쳐 가지고. 저것 가지고 지금 산단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것 토양오염물질 정화비용 이것을 LH가 아니고 자치단체, 창원시·경상남도 너희 다 대,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2년째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보다도 더 많은 토양오염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는, 안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진행 안 시키기 위한, 지연 전략을 시키기 위한 꼬투리를 잡으려 그러면 한이 없습니다. 지금 왜 호남 반도체에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으면, 외교 문제까지도 지금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면서도 왜 부산·경남 유일한 산단 후보지라고 할 수 있는 저 방위산업·원전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주물럭주물럭하고 있는 겁니까?

장관님께서도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 조그마한 저 문제 가지고 이렇게 2년째 끌고 있어야 할 그럴 상황입니까?

첨단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속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간 보내고 있는 이 사이에 방산·원전과 관련해서는 벌써 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 신속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월 달 안에 끝낸다고 했잖아요. 6월 달 안에 이 문제 매듭짓겠다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벌써 8월입니다. 또 해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LH 사장님 여기 오셨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예.

○**김종양 위원** 부임 인사차 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지요? 그 문제 한번 챙겨 보셨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예, 챙겨 보고 있습니다.

(정동만 간사, 유의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양 위원** 조그마한 저 문제 가지고요 자꾸 시간 끌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LH가 뭐예요? 일반 민간 기업체예요? 이것 가지고 주판 당겨 가지고 돈이 남니 적니 분량 되니 안 되니 그런 이야기해서 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이 뭐예요? 방산·원전 아니에요? 반도체는 호남에 지으니까 빨리 신속하게 어떤 난관도 헤쳐 나가면서 풀어내야 되고 이것은 부산·경남 유일한 영남지역에 있는 그런 산단이니깐 그냥 고려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국민들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지역민들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차별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어요?

○**위원장 유의동** 위원님, 정리……

○**김종양 위원** 좀 신경 쓰시다. 알겠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예.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보충답변을 해야 될……

○**위원장 유의동**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창원 국가산단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게 진척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25년 2월 달에 중도위에서 재심의 결정이 난 이후로 이게 잘 진척이 안 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께 서두르겠다는 약속을 제가 했고 아마 장관이 직접 국토부 공무원과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들을 동시에 모아 놓고 회의를 한 경우는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시 공무원들과 국토부 공무원들 연석회의를 소집해서 그 자리에서 이 산단 문제에 대한 처리 방침에 대해서 다시 빠른 속도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속도를 내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두 가지 원칙을 저는 생각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고 아무리 해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 이런 문제와 연동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는 저는 객관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저의 판단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문제가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급하게 서두를 경우에 담당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생각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했다는 보고드리겠고요.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빠른 시간 내에 회의를 소집해서 다시 한번 창원시와 조정을 해서 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알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의동 예.

○김종양 위원 잠깐만 한 10초만 더 씁시다.

○위원장 유의동 위원님,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에 활용하시지요, 순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김종양 위원 토양오염 여부 비용 문제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만에 하나……

○위원장 유의동 위원님……

○김종양 위원 추진을 했다는 치더라도 뭐가 공무원들이 어떤 일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다친다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별도로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장관님께 제가 만나서 LH 사장하고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철 위원 광주 서구갑 출신 조인철입니다.

요새 용산공원 개발하냐 마느냐 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제 지역구 광주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허탈감도 느껴질 것 같습니다. 용산공원이 국유지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인철 위원 같이 비교되는 센트럴파크는 사유지지요? 국유지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하이드파크는 왕실 토지지요? 국유지인 곳 없지요?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광주공항 이전하는 데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내서 전부 이전시켜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용산공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국가 국유지를 공원화시켜서 그것을 공원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시가로 따져도 많게는 100조 이상이 되는 땅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공원화해서 관리하는 비용도 얼마나 들까요? 적어도 수백억씩 들어갈 겁니다, 매년. 그것을 또 국가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크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인철 위원 그것을 국가에서 다 해 줍니다. 그러나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은 너희 돈으로 그냥 해라라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지방 우리 광주

시민들은 굉장히 허탈할 것 같고 저도 많이 허탈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어제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용적률을 높여서, 그것만이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공원 일부에 부동산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과 검토하겠다는 것 하는 게 지금 국토부 입장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인철 위원 전체를 다 아파트 짓겠다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전혀 아닙니다.

○조인철 위원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인철 위원 일부에 짓는 것도 안 된다. 지금 이미 녹지가 아닌 공간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조인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절대 보존해야 된다, 국가 돈을 들어서 그냥 보존해라라고 하는 게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서울과 비교하면 상당히 형평성에도 문제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문제 인식에 많은 부분 공감하지만 또 그 문제보다 더 어쨌든 우리 후손에게 녹지 공간들을 물려준다고 하는 대원칙 이것은 어떤 특정 지역 문제만이 아니고 전 국민적 요구라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에서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어제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했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높여 달라, 그러면 주택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일반 분양 아파트가 지금 시가로 얼마나 됩니까, 서울에서? 웬만하면 10억 넘어가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구체적인 수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웬만하면 거의 20억 가까이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청년층이 접근할 수 있을까요, 쉽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지금 청년층, 39세 이하 가구주의 주택 보유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인철 위원 최근에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거의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0% 이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주택 자체에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청년 가구주들이.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도 청년한테 공급이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 하는 게 용산공원 일부에 아파트를 조성해서 공급하겠다는 기본 취지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런 취지로 좀 널리 홍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카톡방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반대 여론도 많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도 좀 해 보시고 실제로 반대가 많은 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에 있는 저희 광주시민들 같은 경우는 별 관심은 없지만 상당히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론조사를 좀 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알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용산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녹지를 대상으로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훼손되어 있는, 그런 주택 건설이 가능한 지역을 숙의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겠다는 게 원칙이고요. 또 거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그건 당연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이런 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국토부의 정확한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범 위원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님께 여쭙볼게요.

그러니까 장관님 설명대로라면 오세훈 시장하고 지금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는데 반대합니까? 실무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봤습니까? 어디 어디를 찍어서 이야기를 해 봤어요? 아직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신성범 위원 아시는 대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이거는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대통령 때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 이때는 녹지공간을 보존하자는 논리가 우세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때 2021년도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주택단지 특별법을 발의했어요. 이때 용산구청장이 성장현 구청장이었고 민주당 소속이었고 이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공개 반대를 표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완전히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네, 도움이 안 되네라고 사전에 미리 짐작하고 대응을 하면 내가 보기에 는 웃깁니다, 이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당연합니다.

○신성범 위원 당연하지요. 그리고 왜 그러냐? 아니, 서울 도심에 남은 유일한 녹지공간이 용산공원인데 이걸 아파트를 짓는다? 언제까지 얼마나 지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냈는데 본체에는 손을 안 댄다 그러지만 조성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법안을 내니까 지금 반대 의견이…… 국회 시스템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3000건이 넘어요, 3000건이. 국민들이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용산에 살지 않는 국민들도 이게 뭐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20년 넘게 찬반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내일 만나시면 협의를 좀 잘해 보십시오. 잘 아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제가 서울시장한다 해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고……

○**신성범 위원** 그래요? 둘이 만나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서울시장도 국토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아니, 서로 불신을 갖지 않고 만나서 딱딱따박 진짜 지도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렇지요. 원래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성범 위원** 두 번째,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쭙볼게요.

제 주변 이야기 들어 보면 다들 정부가 이번에 고심의 흔적은 있는데 좀 획기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23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10만 가구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지가 정해진 데는 세 곳에 2만 7000이다. 그러면 7만 3000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추가 후보지 발굴은 진행이 되고 있고……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추가 후보지 발굴 문제가 아니고요 7만 3000호는 이미 지방정부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주민공람 절차라든가 이런 행정실무 절차가 있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지역을 공개하지 않았고요. 추가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하는 건 7만 3000호 이 외에 별도로 또 택지개발을 해서 공급할 현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온다니까 전화를 하신 분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 주택임대사업자 정책을 보면 그때는 앞에 열흘 전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팔도록 유도해서 매물이 증가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였는데 열흘 뒤의 8·13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낮춰 주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사도록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임대주택사업자가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집을 팔아라, 사라 이게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나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다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아파트와 비아파트는 주택으로 같이 분류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투기성 내지는 어떤 자산 가치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해서 분리해서 사고해야 되는데 이번 대책은 비아파트에 한정해서, 그것도 신축에 한정해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래요. 자세하게 들어가면 전문가 영역이니까 그렇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작년보다 훨씬 매입 속도가 올해 들어서 늘고 있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의신청하고 결정기한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거 장관님이 잘 모르실 테니까 실무자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그러면 이의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단장이 있는데 나오서 가지고 설명해 봐요. 짧게 설명해 봐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영국** 지금 임차인이 신청을 하고 30일 이내에 접수 조사를 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하고 1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성범 위원 45일이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영국 예.

○신성범 위원 그다음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영국 이의신청도 저희는 30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귀하가 아셔야지, 그러면.

제가 들으니까 이의신청이 한 77%가 처리기간을 초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담당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미안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이의신청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인원이 몇 명이에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영국 저희가 현재 전세사기피해조사과의 인력이 1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2023년 7월에 출범할 때 17명이었는데 1명 늘었네. 1명 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영국 예.

○신성범 위원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영국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영국 예.

○신성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유상범 위원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위원 수원무 지역 염태영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성범 위원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해서 관심 표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피해주택 경매 과정에서 LH와 피해자 간에 발생하는 우선매수권 경합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2일 법개정 시에 우리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자 간의 이해가 엇갈릴 경우에 특히 다가구주택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화성시 사례를 한번 보면 피해자가 4명인 주택이 있었는데 그중에 2명은 LH 매입을 요청했는데 나머지 1명은 직접낙찰을 요청하니까 경합이 발생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 법원은 매수 희망자에게 먼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이렇게 여럿 있을 경우에 피해자 간 이해충돌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때는 적어도 다수의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염태영 위원 그래서 개별 피해자의 차익 독점보다는 공공매입을 통한 피해자 전원에 대한 지원이 공익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개정이 시급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경합이 발생할 경우를 예상치 못하고 피해자 우선매수를 주다 보니까 그게 한 집이 되더라도 그 집으로 인해서 다수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저희가 놓친 경우니까 개정안 저희가 즉시 발의할 테니까 국토부가 준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리고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아시나요?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춘, 주거공간에 돌봄이라든지 자립지원 같은 비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임대주택 형태거든요. 아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데서 운영을 맡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이에 대해서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제1차관님이 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8·13 대책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과 같이 매입형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있고 또 건설형인 경우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이런 데에 있는데 이게 다 훈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지속성과 안정성이 부족해서 이에 대해서 현장에서 계속 불안을 호소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여기 계신 복기왕 의원님과 염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했고 저도 발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운영기관이 될 수 있는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면서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나 또는 운영기관이 될 수 있는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난 정부에서도 이 법 제정안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또 우리 정부 들어서도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대표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8·13 대책에서 강조한 비아파트, 매입임대 이런 공급 총동원이라는 방향과도 일치하고 부합하니까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서 이런 법안을 우리로서는 적극적으로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때마다 지금 협의에서 누락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또 빨리 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장님, 법안을 우리가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이고 민생에서 현장에서 요청하는 거니까 빨리 좀 다뤄 주십사 하는 요청과 함께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법안 검토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니까 최대한 빨리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님과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염태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시간을 멈춰 주시고 LH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마이크를 바짝 당겨서 답변을 해 주시고 좀 큰소리로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훈 LH 사장님, 목포에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아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임성지구 개발사업은 당초 목포시가 2000년도에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LH가 사업시행자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예.

○허영 위원 그래서 보면 2000년도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벌써 27년 가까이 된 사업이지요. 실제적으로 13년 목포 임성지구 지정을 LH가 한 이후부터는 벌써 14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완공 시기가 제대로 됐으면 2023년도에 완공이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본격적인 공사 착수조차도 못 하는 상황이지요.

사장님, 이게 지구 지정이 되면 제일 먼저 땅값이 올라가지요? 그리고 개발제한 허가 구역으로 되면 개인 재산권 처분이나 모든 것들이 제한이 있게 되지요? 재산권 제한이 있게 되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땅값이 올라가면 토지 변경도 되고 그래서 땅값이 올라가면 국민연금도 올라가고 건강보험도 올라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예, 그럴 걸로 생각합니다.

○허영 위원 이게 2000년서부터 주민들은 LH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수십 년간, 최소한 15년간 재산권 제한과 건강보험료 올라가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올라가서 세금 납부만 들입다 하고 피해를 십수 년간 받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니깐 당시 4200억 원이었던 총 사업비가 1519억 증가했어요.

또 LH의 답변을 보니까 추가적인 사업성 확보에 구조적 한계도 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요. 이것 추진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아마 건설 공사비가 급등하는 바람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LH가 왜 사업성 검토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넘겨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제대로 된 사업성평가를 통해 가지고 하지 마셨어야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방법이……

○허영 위원 그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러면. 십수 년간 이런 재산권 침해와 세금 문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빨리 추진하든지. 빨리 추진하시겠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허영 위원 빨리 추진하실 거지요? LH가 사업 주체 아닙니까? 방법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착공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뭘 방법을 또 검토해요?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잘 검토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추진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빨리 추진하십시오.

장관님, 이것은 십수 년간 주민들에 고통을 안겨 주는 LH의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렇게 사업 검토하고 결정하고 지정 고시하고 또 사업성 재검토하고 이런 과정들이 제가 봐서 문제가 많아 보여요. 국토부 차원에서 자체 감사도 필요하고 국토부에서도 LH의 적극적인 지시 감독들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장관님,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결정 건수가 한 62% 감소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결정 건수 감소만으로 전세사기가 감소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렇지요.

○**허영 위원** 보고서에는 신청 건수, 신청 대비 인정률, 불인정 건수와 사유, 신청되지 않은 잠재적 피해 규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허영 위원**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6%가 이삼십 대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자 아닙니까? 평균 회수율이 48%예요. 그렇게 돼 버리면 실제 피해 회복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반 이상이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엄청나게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예 구제가 안 되는 회복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도 조금 더 해야 돼서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된 금액, 경매차익을 통해서 회복된 금액……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규 대환, 구입 자금 등 대출액 이러한 것들을 지원 규모 자체를 조금 더 세분화해 가지고 면밀하게 피해자 부분들에 대한 세부 부분들이 필요하다, 여기에 따라 또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장관님, 요새 민간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랑 장특공 폐지로 인해서 굉장히 항의 전화, 문자 많이 받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2024년 3월에 현재에서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

료 증액 및 임대기간에 대한 제한, 증액시기 등이 재산권 침해다 그래 가지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그 당시 청구인은 본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해친 게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심판 대상 조항을 준수할 것을 요건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걸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거의 10년 만에 갑자기 2028년 이후에 소위 양도세 및 종부세 등에 대한 혜택을 취소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을 보시면, 즉 이분들에 대해서 재산권을 제한했지만 세제 혜택의 보상이기 때문에 적절하다는 겁니다. 즉 이들은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단순히 무슨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하면서 세제 혜택을 없애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건 왜 했습니까? 전월세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투기자입니까? 임대사업을 하려면 매입형 아파트로 해서 임대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은 국가 정책을 따른 거예요.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게 2028년 되면 총 몇 가구나 되는지 아십니까, 매입형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철회되는 게? 잘 모르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죄송합니다. 수치는……

○유상범 위원 6만 8000호입니다. 적어도 단순히 여러 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6만 8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한 약속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이어 오면서 이 사람들은 어느 정부에서 약속을 했느냐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나한테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인정이 돼야 돼요. 만약 이걸 폐지한다는 것은 개인 재산권 제한에 상응한 세제 혜택을 소급적으로 없애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그렇게 국가가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국민과 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게 있습니다. 뉴홈 전용 모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께서도 고정금리라고 적시돼 있지만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변동할 수 있다고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뉴홈 공급을 약속받은 게 아니잖아요. 국가로부터 약속받은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럼요,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는 건 거기서 약속한 최대 5억 한도 40년 만기 연 1.9%~3.0%의 고정금리 전용 모기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약속한 게 뭡니까? 나눔형의 경우에는 나중에 처분이익의 30%를 국가에 귀속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요건 안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지금 국토부에서 바뀐 요건은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본 청약 공고해서 디딤돌 대출로 바꾸고 LTV 70%로 낮추고 이러다가 국민적 여론이 나빠지니까 다 돌렸어요, 정정공고로. 다 보이시지요? 그러면서 디딤돌 대출 그다음에 LTV·DSR 미적용 이걸 다 문제가 없어요. 단지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 부분만 지금 국토부에서 변경을 한 거예요.

금리와 만기가 다르면 이걸 다 바뀐 겁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젊은 30대·20대, 지난 번에 보고 다 냈잖아요. 그 친구들의 희망과 꿈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른 대출로 바꿔 버린 거예요. 이걸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국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가 그 위에 고정금리라고 적어 놓은 것을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그 문구 하나로 바꿀 수 있다라고 변명하는 것을 그 젊은이들이 본다면 장관님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야 되나요? 국가가 약속한 거지 정권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지켜 주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유상범 위원 그리고 보시지요.

지금 디딤돌 대출과 이 대출 차이가 이들이 월 부담해야 될 것이 152만 원으로 거의 50만 원 가까이 증가하는데 뉴홈의 당시 자격이 얼마나 하면 월 소득 232만 원인가 그래요. 이렇게 되면 80만 원으로 먹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 이 정책을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만기와 금리 부분을 빨리 결정해 주셔서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국토부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유의동 장관님, 뭐 더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거의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문 나가는 과정에서 작은 글씨로 써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처리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는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다만 우리가 보험회사도 아니고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국토부가 책임이 없다고 하거나 이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범 위원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다음 주에 대표님 만나서 또 관계자들을 만나서 협의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의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태 위원** 대전의 서구갑 장종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모경중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원자금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되는데 조금 짚어 볼 때가 있어서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차보전에는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접 용자와 달리 원리금이 기금으로 회수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한 번 나간 대출의 만기까지 매년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내려간 2024년과 2025년도도 집행액은 49%, 22%씩 늘었습니다. 그것은 잔액이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예정처의 분석에 따르면 이차보전 대출 잔액은 138조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규모에서 만일에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재정 부담에 큰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디딤돌은 약 293배, 버팀목은 약 65배를 이차보전으로 지출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 100명이 정책대출을 받았다면 그중에서 99명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33조 9000억 중에서 33조 5000억은 은행이 대신 실행하였고 정부가 지급한 이차보전금 1조 6941억 원을 아무런 위험도 지지 않고 있는 은행에서 가져가게 되는 건데요. 지원 가구는 무려 13만 3000 가구가 줄었으며 지원액도 전년도 비교해서 8조 7550억 원에서 4358억 원으로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이차보전에 이만큼 의존해서 서민주거안정기금을 은행의 이자놀이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결과를 만드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도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금이, 여유자금이 사실상 고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차보전, 특히 은행의 재원을 활용해서, 그런 방식을 택했다고 보고드렸고요. 다만 여유자금을 빨리 더욱 확보해서 종래와 같이 기금 재원을 직접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태 위원** 제 생각에는, 결국 이차보전금이 재원 부족으로 전환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기금 수입계획의 104조 중 약 98%인 101억 3000만 원이 계획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오히려 2000억에 그쳤고요. 이렇게 본다면 또 같은 주머니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화면이 떠 있습니까? 안 떠 있는데, 이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90% 이상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재원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집행이 어려웠어야 하는데 그런데 유독 서민 직접 대출만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나 마찬가지여서 걱정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돈을 쓰는 순서의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결국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한정된 기금을 어디에 먼저 쓸지 우선순위를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답변을 드리고요.

장관님, 주택도시기금의 시작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 국민들의 그 몇만 원에는 신혼부부의 첫 집이 있고 아이들에게 자기 방 하나 만들어 주고 싶은 부모님

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전월세를 전전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서민들의 희망이 담겨 있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믿고 맡겼는데 정부는 그 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제대로 보여 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조차 이걸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아볼 수 없는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택도시보증법을 개정해서 여유자금 운용 현황과 집행실적을 단계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좀 넣고 싶고요. 둘째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이차보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 소요를 추계하고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장관님, 국토부도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함께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필요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답변 못 하신 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금이 상당한 고갈 위험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 재정 확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예산 당국과 그런 문제를 긴밀히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기금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종태 위원** 사전 협의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복기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유의동** 예.

○**복기왕 위원**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었어야 됐는데 좀 늦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18일 날 거제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인명이 피해를 입고 또 부상도 입고 그리고 수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옥포동에 있는 삼도로얄맨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어서 현재 이분들이 거주할 만한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사항으로는 그리고 거제시의 요구사항으로는 현재 종합복지관이 나 초등학교나 이런 데 시설에 대피 중에 있습니다만 거제에 있는 LH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혹은 매입임대라든지 이런 곳에 공실이 있다면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공이 갖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이재민들이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부처가 행정안전부입니다만 우리 국토부도 이것과 관련해서 연관된 부분이 있다면 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국토부장관과 공무원

들에게 충분한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의동 감사합니다.

북기왕 위원께서 지금 저에게 건의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해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제시민들을 위해서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하는 데, 피해시민들을 돕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질의를 또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종오 위원 울산 북구의 진보당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장관님,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폭염가이드라인,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2시부터 5시까지 실외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38도 이상 시에는 실외작업을 완전 중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통 실내작업으로 대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의 건설조합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작업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신 분이 50%가 넘어요. 사실 골조가 올라가는 현장구조로 봤을 때 실내인지 실외인지 구분하기도 상당 부분 힘들고요.

그래서 폭염이 진행되면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이때 혹시 대기하는 시간에 임금을 줄까요, 안 줄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안 줄 것 같은데요.

○윤종오 위원 제 의도가 안 줄 것 같은 의도가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오 위원 그런데 사실 무임금 대기시간 때문에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발효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작업자 입장에서는 쉬는 동안에 돈을 안 주니까 덩디라도 그냥 빨리 일하고, 더 하고 시간 채우고 가야지 자기 일당이 보전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금 보전되는 게 어느 정도나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한 16.4%밖에 안 됩니다. 거의 85% 가까운 분들이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실제로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될 텐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발주 공사현장에 이미 기후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오후 1시부터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오후의 작업시간 최대 4시간까지 1시간에 1만 7210원, 최대 6만 8400원까지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받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만 했던 결과를 보니까 7월 28일부터 4일 동안 했던 결과가 18개 업체가 그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이처럼 발주처가 조금만 신경 쓰면 무리한 작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지금 국토부나 또 공공발주현장에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도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장관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실무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허그의 최인호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최근 허그 리츠가 토지를 소유하고 녹색친구들이라는 단체가 운영하는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녹색친구들이 운영하는 연남점이나 대조점의 경우에는 피해주택 매입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예, 사실상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가닥을 잡았습니까? 하면 언제쯤까지 완료가 됩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9월 내에는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런데 조건이 비슷한 삼송점, 여기는 매입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이게 토지임대계약서의 건물가액의 감정이 50%로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 희망가격하고 또 리츠가 살 수 있는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커서 이거는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야만이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 매입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되는 거잖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구제를 하는 원칙하에서 이것을 법률적 검토를 최대한 융통성 있게 받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소비자 입장에서 허그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런 사회주택을 하는 회사들이 분양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공공기관이 하니까 엄청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이게 지금 주택사기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그렇습니다.

○**윤종오 위원** 전세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추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적극적으로 행정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예,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임차인을 어떻게 하든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법률적 검토를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위원님 희망대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SR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장관님, 제가 항공사 마일리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좀 황당한 답변이 왔습니다. 이 마일리지를 요구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어떻게 마일리지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제가 굳이 항공사업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회도 충분히 검증하고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에 ‘여러 가지 항공시장의 피해가 국가경제에 미칠 것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일리지 확인하는 게 국가경제 피해까지 미칩니까?

이것 저는 이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셔서 제대로 된 답변이 올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SR 사장님, SR의 지난 5년간 법적분쟁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유독 임금 지급,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이 많습니다. 전체 소송 중의 50%에 해당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다른 여타 공공기관에 비해서 매우 높은 이유인데요. SR의 임금체계가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주식회사에스알대표이사 정왕국** 대부분 통상임금 관련 소송입니다.

○**장경태 위원** 대부분 통상임금 관련된 소송이지요.

○**주식회사에스알대표이사 정왕국** 통상임금 소송은 법적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승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통상임금 범위에 들어가는지……

○**장경태 위원** 임금 분쟁으로 패소해서 지출한 금액이 29억이고요, 계류된 사건이 모두 패소할 경우에 127억입니다. 만약 노사분쟁으로만 156억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SR 적자가 작년도 대비 350억이기 때문에 45%에 육박하는 비용을 부담하시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주식회사에스알대표이사 정왕국** 통상임금 소송이 대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은 총임금의 범위 내에서 노사 간에 합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경태 위원** 그래서 5년간의 노사분쟁 관련 대책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미회신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되었건 결국에는 이 소송 실무 담당하고, 코레일 채권으로 확보하고 나중에 양수도대금 다 결국 코레일 측에 상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하고 나서는? 결국 코레일의 자산이, 결국 SR의 자산이 다 통합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식회사에스알대표이사 정왕국** 예.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코레일 사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김태승** 코레일 사장입니다.

○**장경태 위원**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코레일과 SR 민사소송 진행하고 있지요? 민사소송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차량 정비 관련된 비용 관련된 소송이잖아요.

○**한국철도공사사장 김태승**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소의 이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김태승** 이건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이 되고 난 다음이라고 하더라도 청산 범위 내에서 소는 계속 진행을 할 것……

○장경태 위원 담당자가 책임은 져야 된다는 입장이지군요.

○한국철도공사사장 김태승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관님, UAM 사업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이것 지금 모빌리티자동차국 소관 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모빌리티자동차국입니다.

○장경태 위원 자동차 국장님한테 여쭙볼까요 아니면 장관님께서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장경태 위원 지금 2020년에 K-UAM 로드맵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기 상용화 목표가 25년 상용화 목표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21년 3월에 또 K-UAM 기술 로드맵 사업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도 이 상용화 목표 유지했습니다, 25년에. 그런데 25년 8월 29일에 UTK에서 갑자기 변경되는, 25년에서 28년으로 늦추는 의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UTK가, 그러니까 소위 UAM Team Korea 본협의체라고 하지요. 이 단체 협의체가 공식 의사결정기구 권한이 있습니까? 그것 밝혀 주시겠어요? 아니면 국토부 내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 UTK에서 변경 확정 고시를 한 것인지, 고시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면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모빌리티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국토교통부모빌리티자동차국장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입니다.

UAM Team Korea는 의사결정기구는 아니고 민관이 협력해 가지고……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5년 상용화 예정이었는데 25년 상용화 못 하지요. 그 당시 청와대를 용와대로 옮기면서 P73 A구역, B구역 다 들어가서, 한강수역이 다 들어가서 운행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UAM을. 원래 한강이 UAM의 주 통로였잖아요, 도로였고. 하늘 도로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UAM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청와대의 용산 이전이 가장 정확한 이슈 아니었습니까?

○국토교통부모빌리티자동차국장 박준형 저희들이 실증은 열심히 해 왔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기체, 기체 개발을 우리나라에서 못 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유럽에서 개발된 기체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2020년에 저희 의원실 하고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의도공원에서 UAM 기체를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기체가 중국산이라서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미국과 영국, 여러 가지 기체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치가 늦어지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논의, 의사결정구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의원실에 와서 설명 안 해 주셨지요? 이유를

물어도 아무도 답변을 못 해요, 보니까. 제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모빌리티자동차국장 박준형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정일영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볼 텐데 잘 답변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급대책 지난번에 발표했는데, 많은 내용 발표하셨는데 다 들어가 버리고 잘 눈에 안 띄고 용산공원으로 이게 올인, 그냥 함몰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용산공원 개발 관련해서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면 더 혼란스러워요. 헛갈려요.

무슨 얘기냐면 8월 14일 날 기자간담회 하실 때 ‘용산어린이정원은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 중이다. 주택 공급 모든 가능성 열어 놓고 검토한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용산공원 전체를 아파트 짓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도 몇백 통씩 항의문자 날아오고 뉴스, 언론들이 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님 오늘 발언 듣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훼손된 곳에, 그렇지요? 훼손된 곳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개념이 확 좁아지는 거예요, 면적이.

여기서 제가 여쭙볼게요. 어린이정원이 30만㎡, 용산공원 전체가 300만㎡인데 훼손된 곳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정일영 위원 그러면 대강이라도, 전체 면적의 몇 분지, 3분지 1이든 4분지 1이든, 그리고 몇만 세대, 몇만 가구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검토가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그러니까 용산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일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설명은 앞에 길게 다 들었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저희들이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짓겠다라고……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훼손된 곳이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 용산공원 전체의. 그것도 몰라요? 누구 아는 사람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차관이 답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장교 숙소라든지……

○정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몇 분지, 대강이라도. 국민들이 이 난리가 났는데 면적을 대강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용산공원 4분지 1인지, 3분지 1인지, 2분의 1인지. 우리 국민들은 용산공원 전체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런 뜬구름 잡는 거 가지고 이 사회적인 논란과 혼란을 일으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마치 이걸로 실패나 성공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그

런 분위기로 가는데 국토부에서 몇만 평방미터 아니면 전체 면적의 몇 분지 1, 몇 세대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나와야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요, 이 문제는 용산공원은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그건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 되는 거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법을 바꿔야 되고 또 숙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사전에 어떠한 것들을 진행한다는 차원을 준비하는 것 또한 자칫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좀 답답한데요. 우리 사회가, 나라가 지금 이것 때문에 그냥 시끄러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고 논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 진짜, 나중에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꼭 필요하다면 그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갑갑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좀 보여 주세요. 이것 용산은 다음에 또 하고요.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보면 하자, 아파트 하자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송도럭스오션SK뷰 아파트가 붕괴되고 부실시공이라는 게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의 김석기 건설정책 국장인가? 현장도 가 보고 아주 적극적으로 해 줘서 고마운데, 어쨌든 인천시하고 사고조사위원회 구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게 대처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좀 조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GTX-B가 예산 집행이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예산 집행하고 공사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이게 현재 지금 전체 공정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진척이 되었나요, GTX-B? 계획 대비해서 몇 퍼센트 진행되었는지 뒤에서 좀 자료를 주시고.

양평고속도로 이것도, 이게 타당성 그러니까 전략환경평가 예산 2억 2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양평고속도로도 이게 문제가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노선 변화가 없는 45% 구간은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이게 윤석열 정부 때 100조나 세수 결손이 났었어요. 그래 가지고 서민들이 청약 저축한 돈을 갖다가 공자기금으로 갖다 썼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청약 저축한 돈을 갖다가 세수 결손 난 걸 떼우기 위해서 공자기금으로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사례는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국토부에서. 그렇잖아요?

간단한 거 한 두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공자기금, 그러니까 주택기금이 공자기금으로 간 거하고 GTX-B, 양평고속도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1차관계서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담당 실장이……

○정일영 위원 예, 누구 아시는 분이 하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영국 공자기금은 저희가 주택기금에서 공자기금을 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고요. 25년에 저희가 공자기금에 9.9조 원을 예탁을 했고 0.2조 원을 수취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정일영 위원 그 내용을 알아요. 내용 아는데 그게 세수 결손 때문에 공자기금으로 가져간 거라고요. 그런데 세수 결손을 떼우기 위해서 주택기금에서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직접대출은 줄이고 세수 결손을 떼우기 위한 공자기금으로 주택기금에서 가져가는 건 안 맞다 이 얘기입니다. 이자 받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더 이상 하지 마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양평고속도로 누가 얘기……

왜 불용이예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효정 도로국장입니다.

양평고속도로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타당성조사를 중단하고 새롭게 타당성조사를 발주해서 지금 계약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타당성조사 언제 끝납니까?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효정 이제 발주했습니다. 1년가량 소요 예정입니다.

○정일영 위원 장관님, 백지화한 거는 직권남용 아니예요?

○위원장 유의동 위원님, 마무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일영 위원 예.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장관님, 아시겠지요, 양평?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게 기사인데 “김윤덕 국토부장관 ‘용산공원 전체에 집 짓겠다’”, 8월 14일에 기자간담회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사가 난 건 봤는데요, 전체에 집 짓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때 워딩을 이렇게 하셨어요, ‘용산공원 전체를 공급 부지로 고민하고 있다’.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제가 좀 부연 설명……

○정희용 위원 그런데 오늘 오전에는 ‘용산공원 공급, 녹지 기능 상실한 곳에 한정해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 정일영 위원님 질의에는 몇 % 공급할 거냐고 물으니까 면적을 대답을 못 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그러니까 면적 몇 %냐고 하는 건 답변 못 한 거고요. 용산 어린이정원에 집을 짓느냐고 물어보면 아니다,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하겠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용산공원 내에 이미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주택을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게 몇 %냐, 몇 평이냐 물어보면 지금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할 수 없습니다.

○**정희용 위원**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 못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야기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지도 보여 주고 설명을 드릴까요?

○**정희용 위원** 그런데 오늘 오전에 하준경 경제수석이 나와 가지고 인터뷰하고 오전에 청와대에서 언론 공지를 했는데 ‘용산공원 활용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방식·주체·시기 등은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

청와대에서는 용산공원 활용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협의 중이고 국민 의견 수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장관님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고 국민들은 여기서 혼란을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반대 의견도 많은데 용산에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주장으로 국민들한테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그냥 재개발·재건축, 민간정비사업, 도심고밀도복합개발, 실효적인 공급 정책을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용산공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산공원 전체를 밀고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다. 그리고 용산공원 내에는 이미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을 지어서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게 국토부 입장이고, 다만 이것 또한 법을 바꾸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숙의 과정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국토부의 정확한 입장입니다.

○**정희용 위원** 국민적 숙의 과정과 이런 게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소모적으로 짓겠다부터 해 가지고 위원님들 문자 많이 받으시는데, 용산에 아파트 공급하면 안 된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숙의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거라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은 오해가 풀리셨나요? 이게 오해가 너무 많아서 오해를 푸는 게 일단 급선무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희용 위원** 숙의 과정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희용 위원**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두 번째는 슬라이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한테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용 관련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집 샀다고 부동산원에서 등기 친 지 7개월 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계좌 거래 내역을 가계약 전 2주부터 잔금 후 2주까지 전부 내라고 한다, 달랑 12일 주고 온갖 서류 다 찾아서 내라고 한다, 소득증명원도 5년 치나 내라고 한다, 이런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등기하고 나서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하니까 힘들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공감되고 이해는 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희용 위원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원에 문의하니까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7년 여가 지났는데 현재까지 관계기관 자료 연계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연계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님 말씀에……

○정희용 위원 제도는 만들어 놓고 7년 동안 관계기관 간에 자료 연계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디테일한 건 잘 모르지만 의견이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서 부동산원하고 협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부동산원하고 협의해서 가지고 국민들 자료제출 부담이 좀 경감되도록, 과도한 자료제출의 소명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준 위원 오늘 저는 제 평소 질의와 다르게 좀 가벼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청 문성요 청장님, 가신 지 이제 한 세 달쯤 되셨나요?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요 예, 맞습니다.

○안태준 위원 가서 사자 있는 것 보셨어요, 사자?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요 사자……

○안태준 위원 악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렇던데.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요 아, 콘텐츠……

○안태준 위원 악어, 사자, 코뿔소, 혹시 거기 살기는 삽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요 아닙니다.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러면 저 영상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새만금 핵심보전지구 메타버스인데요. 우리가 유행을 하면 이것을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20년, 윤석열 정부 그때부터 메타버스가 유행을 할 때인데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런데 저게 도대체 새만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저런 걸 하고, 또 한번 보실래요?

저희가 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동물원이 폐쇄가 됐는지 이게 어떻게 다 죽

었는지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대체 공무원들이 납품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다음 것 한번 보세요.

이게 게임 영상인데, 'JUST DOWN'이라는 게임 영상입니다. 막 무작정 뛰어내리는 게임은 도대체 새만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콘텐츠 표절로도 보이는데, 옛날에 'ONLY DOWN'이라는 게임이 있었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 표절한 것으로 보이고, 다음 것도 한번 보실래요?

이것 VR인데 호러 방탈출이라는 영상입니다. 이것은 또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새만금 알리고 방문객 유도하겠다고, 이런 게 한때 유행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돈을 보니까 8억 6500, 여기에 8억 6500을 썼고 또 26년 사업도 2억 4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1억 4000이 업데이트하고 기능 개선 예산입니다. 이게 청장께서 청장 오기 전의 일이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이대로 끌고 갈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

요즘에 영상 그냥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도요 돈 들이지 않아도 이것보다도 훨씬 잘 만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납품을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것을 납품을 받아 주는 공무원들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대체 무슨 생각으로…… 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뭘 검수했는지, 무슨 유지관리 용역인지, 올해는 어떻게 썼는지도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요 예, 알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보면 되게 유행처럼 요즘에도 여러 부처나 공공기관에서도 AI 활용해서 영상 제작도 많이 하고 관련 사업도 엄청나게 끌어 넣습니다. 국토부도 그렇고 국토부 소관기관들도 많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AI를 쓰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메타버스가 유행한다고 해서 너도 나도 사업을 많이 만들었어요.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활용도가 없이 그냥 돈 쓰기 위한 사업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 들고요.

이런 버추얼 새만금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분들께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유행을 쫓아서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고요 사업 취지에 맞고 실제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부터 집행·검수까지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국민 세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요 예, 알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요 예, 알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다음에 자동차손해보험배상진흥원장님 오셨습니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하대성 예.

○안태준 위원 저쪽으로 나오시고, 잠깐 끊어 주시고요.

정부가 우선 보상하고 구상권 행사해서 하는 사업 하고 계시지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하대성** 예.

○**안태준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권원 확보된 것만도 2687억이던데, 그러니까 지난해 수납률이 8.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어렵고 어찌고 이런다 그러는데 이게 대부분 범죄혐의자들한테 대신 내 주고 받는 돈이잖아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하대성** 땡소니, 무보험 했던 분들의 피해자 보상하고 거기에 대해 구상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태준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안 받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고요. 이것을 만약에 받아 갖고 10년, 3% 복리로만 계산해도 이자만 733억이 나옵니다. 안 받고 계산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그러면 차라리 못 받는다고 아예 선고를 하든가, 그런데 못 받는다고 한 것도 사점몇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잘 관리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하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하대성** 예.

.....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운하 위원** 장관님, 내일 오세훈 시장하고 만나실 계획인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황운하 위원** 거기에서 용산공원 관련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하여튼 최대한, 내일 만나는 의제는 용산공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제가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용산공원 관련해서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최대한 신뢰를 갖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장관님 또는 정부의 입장은 용산공원 전부를 주택단지로 활용한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이미 녹지가 훼손된, 녹지로서 기능을 못 하는 지역이 있거나 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찾아 가지고, 용산가족공원에 한정하는 것도 아니고 녹지를 주택부지로 활용해도 좋을 만한 데가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황운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 거기에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부담 가능한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한번 공급해 보겠다 그런 계획인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런데 그것조차도 입법하고 또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물론 공론화 과정 거치고 숙의 과정 거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요.

아무튼 이게 한쪽은 환경권을 내세우고 있고 또 이것을 개발하자는 쪽은, 다 개발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주거권, 주거권과 환경권은 우리 헌법상 똑같이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본권의 충돌 지점이라고 보아집시다.

그렇지만 외국의 사례를 폭넓게 연구해 보시면 이러한 도심의 녹지 개발과 환경권이 성공적으로 융합한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뉴욕의 하이라인이라는 파크를 한번 가 봤었어요. 장관님 아직 안 가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황운하 위원** 행복청장은 한 번 가 봤지요? 하이라인 파크 기억 나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예.

○**황운하 위원** 하이라인 파크도, 이른바 그린 네트워크 전략이라는 것 들어는 보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황운하 위원** 그린 네트워크 전략을 잘 활용하면 이렇게 융합할 수 있다. 환경과 개발을 융합할 수 있는 사례를 폭넓게, 샌프란시스코의 프레지디오 파크라는 데도 있대요. 여기도 성공한 융합 사례로 평가받는데 이런 것도 한번 두루두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층들을 위한 주거단지도 확보하고 또 녹지를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으니까 이게 잘 융합이 돼서 접점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잘 알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런데 거기만 찾을 게 아니라, 시간이 별로 없네요.

어쨌든 거기만 찾을 게 아니라 서초동의 대법원도 이전시키고 그다음에 곧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검찰청은 이게 사실 불필요한 공간이거든요. 서울중앙지검·고검·대검 이게 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검을 중앙지검·고검 등과 통폐합시키고 대검 부지하고 대법원 부지하고를 활용하면 거기도 제가 보니까 한 1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3만 평 정도 확보되더라고요. 이것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대법원을 이전하는 법안은 지금 많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법원 이전하고 그다음에 대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잖아요, 10월 2일부터. 그러면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청사하고 충분히 통폐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3만 평 서초동 땅을 잘 활용하면, 거기는 녹지도 아니고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황운하 위원** 행복청장님, 세종 집무실이 자꾸 늦어지고 있잖아요. 늦어진다는 게 자꾸 예산이 이월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물론 대통령께서 빨리 서둘러라 해 가지고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 대통령께서 또 상징성,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런 것을 충분히 담아 낼 수 있도록 좀 보완하라는 지시를 하셔서 가지고, 지금 보완 작업은 진행 중인 거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예, 시작했습니다.

○**황운하 위원** 보완 작업을 해도 2029년 8월 입주 목표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황운하 위원** 그래서 2027년 8월에 착공할 계획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장 없이 착공할 수 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지금 기본 및 실시 설계 착수했고요. 당초에는 12개월에 걸쳐서 할 계획이었는데 1개월 단축해서 11개월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7월에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8월까지 두 달 정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8월에 착공하려고 그렇게 공정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황운하 위원** 관리 잘하셔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군 위원** 장관님, 지난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셨는데 기존 전세임대 제도를 보완한 것은 잘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세임대사업 실적을 살펴보니깐 2025년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 선정 실적은 6만 6000건인데 실제 전입한 것은 3만 3300건, 딱 49.9%에 불과해요.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8·13 대책에서 수도권 1인 기준 지원 한도를 최대 1억 2000에서 2억 4000만 원까지 두 배로 높였고 소득·자산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보완을 잘해 주신 만큼 앞으로도 선정 실적뿐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입주했는지까지를 성과 관리로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군 위원** 앞으로 꼼꼼히 잘 살펴 주시고요.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8·13 대책에서 기존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실적을 보면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4년 말부터 25년 말까지 전국 기준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채고는 6.6% 증가했는데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주택은 20%나 증가를 했습니다.

장기 미임대가 늘었으니까 매입임대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닙니다.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조에 맞춰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좀 더 세심하게 챙기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임대의 경우에 물량 확보한 것 수치뿐만 아니라 실제 입주율 그리고 장기 미임대율 이런 것들을 공급 이외에도 결과로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범정부 공급 점검체계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성과관리 지표로 연계해서 관리하고 지표가 악화되면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사업 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군 위원 다음은 건설기계 연식 제한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건설현장에는 천공·항타항발기, 기중기, 펌프카, 굴착기 등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건설기계들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임대사업자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한 사람이 기계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생계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최근에 건설경기 침체, 고유가 또 이에 더해서 법적 근거조차도 없는 건설기계 연식 제한과 조종사 나이 제한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관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건설기계들은 어떤 기준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게 합당할까요? 생산연도가 중요하겠습니까, 성능 유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당연히 성능 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타는 자가용도 성능 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10년, 20년 타잖아요. 5년 전에 생산되었지만 1만km 탄 차하고 1년 전에 생산되었지만 20만km 탄 차가 있다면 어떤 차가 더 성능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1만km 탄 차가 더 성능이 좋을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군 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현장에서는 고가의 장비를 생산연도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군 위원 펌프카는 5년에서 8년, 기중기는 10년 이렇게 일률적으로 생산연도를 제한해서 이 기간이 넘으면 대형 건설사들이 임대계약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장관님은 이해가 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또 하나 심각한 것이 이게 법을 위반한 거예요.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7조(원재료 검사)에 보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연식제한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사용 및 운행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갑한테 뭐라고 항의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명백한 불법·불공정 행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명분은 좋은데 그게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잖아요.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군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외국 사례를 찾아봤는데 국토부에서 더 자세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군 위원** 싱가포르는 중고 크레인 수입 기준이 20년·25년 장기로 되어 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 사용 제한하자는 청원이 들어왔었는데 노후화 정도는 연식이 아닌 유지관리 상태에 좌우된다는 매우 상식적인 이유지요, 이런 이유로 이 청원이 기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장관님도 이해가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상생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현장 실태를 꼼꼼하게 조사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역 간의 상생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서 국정감사 전까지 저희 의원실에 꼭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이런 사실을 장관님 알고 계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군 위원** 대책도 세우고 계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저번 타워크레인노조 파업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연식 제한 금지 요구가 있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뭔가 유관단체와 함께 논의할 때 저희 국토부가 적극 참여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 준비된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엄태영 위원** 이재명 정부는 5국 3특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그 출발점이 광역교통망 구축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 1국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 왔지요.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광역교통망 구축을 강조하면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기 개통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엄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아십니까?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아직까지도 개통 시기를 확정하지도 못하고 6년이 넘는 장기 지연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때 청원심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청원을 받아서 한번 다루었던 그런 사안입니다마는 장관님, 공정률이 99%인 철도사업 하나도 제대로 개통하지 못하는 정부

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5극 3특 정책을 과연 실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업 완료를 눈앞에 둔 과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논하는 것은 언감생심인 꼴입니다.

예산편성 면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자철도 운영 지원사업 결산 내역을 보면 8억 20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2025년도에는 부전-마산선에 2025년 3월 개통을 전제로 임대료·운영비 지급 예산 987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낙동1터널 구간 잔여 피난연결통로 시공 방안에 대한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견 때문이었지요. 하여튼 부전-마산선의 지속적인 개통 지연은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뿐만 아니라 교통환경 개선 지연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임에도 국토부는 2025년 연말까지는 최종 계획을 도출한다고 했음에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커녕 아직도 사고조사위원회 운영만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에는 4개월 더 연장해서 10월 4일까지 사조위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우려되는 점은 사조위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하여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실에도 사조위 구성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공정성 논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과 유사한 지반 환경이라서 또다시 사고 발생 우려 때문에 시공을 지금 기피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피난연결통로 시공이라는 결과를 정해 놓고, 답을 정해 놓고 사조위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문제 제기, 제가 의견을 제기합니다. 아무튼 이해관계자 모두가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사고조사 결과 발표 후에도 또 다른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또다시 개통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사조위 운영의 공정성·객관성·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속한 개통을 위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조속한 개통에 우선해서요 저는 개통보다—빨리 개통해야 되겠지만—더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태영 위원** 물론 안전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안전 문제인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간 업체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거의 불감증에 가까운 정도의 자기 편리식 주장을 하고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조위가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사조위가 공정성 위반했다면 진짜 발본색원해서 저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사조위가 안전을 내세워서 굉장히 차분하고 치밀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이 자기 이익 앞세워서 끝까지 자기 방식만 고집한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무엇보다도 안전을 위주로 해서 저는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현재 국토부의 방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완성된 구간만이라도 하루빨리 부분 개통을 해 가지고 가능한 노력을 하겠고 그다음에 완전 개통은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선에서 최대한 빨리 서두

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염태영 위원** 물론 안전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벌써 6년이 지나도록 99%의 공사가 완료됨에도 그것 하나 때문에 6년째 개통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국토부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공정한, 사조위를 통해서 빨리 결론을 내서 빨리 개통되길 바라고요.

주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에서도 공동 도급에 들어간 영세업체들에 대해서 책임전가·압박 등 여러 가지 또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국감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동만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동만 위원** 건강은 괜찮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좀 안 좋습니다.

○**정동만 위원** 오늘 많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용산공원 개발 저도 준비를 했지만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서울시장님과 만난다고 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동만 위원** 오늘 뉴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셨고 피해자분들 현장과 또 국회를 오가면서 간담회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된 피해자 구제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장관께서 책임지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동만 위원** 다음 주에 만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미팅 예정이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동만 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아시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동만 위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가 1조 3017억 정도 돼요. 문제가 작년까지 추진실적이 210만 필지인데 전체 계획된 542만 필지의 38.9%밖에 안 됩니다.

장관님, 당장 이 사업 마감까지 4년 남았는데 계획에 맞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동만 위원 그래서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이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디다고 끊임없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동만 위원 그런데 국토부 제대로 된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 더 심각합니다. 사업 대상이 7만 8000필지인데 사업 완료된 게 1400필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 완료율이 2%밖에 안 되는데 장관님, 이게 지금 옳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지가가 높은 지역이 실제 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 심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와 함께 여러 가지 대책을 같이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공원이나 도로 등 인프라 정비나 또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일정하게 비판을 받아 마땅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동만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동만 위원 국정감사 전까지 서울시의 지적재조사 추진실적 향상을 위한 조정금 규모하고 고액 조정금 예측 현황하고 필지 유형 등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추진 방향을 설정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지방비에서, 특히 서울시는 지가가 비싸니까 지방비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동만 위원 예.

지역 현안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타가 막바지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동만 위원 지난 5차 때 전국의 16개 사업 중에 부산이 몇 개 사업인지 아시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죄송합니다, 숫자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1개 사업입니다, 1개 사업.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동만 위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성보다는 국민 안전과 편의 그리고 요즘 이야기하는 균형발전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동만 위원 여전히 예타는 경제성을 가장 우선시하는데 기장군 일광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신설, 지금 일광신도시가 최근 인구가 3배나 급증해서 3년간 교통사고만 27건입니다.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장관님 직접 제가 만나서 또 건의를 했는데 중앙선 기장역 KTX-이음

운행에 정말 서울-부산이 훨씬 가까워지고 있고 다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상행이 오전에 한 번 하행이 오후에 한 번 해서 이용에 너무 불편합니다.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부산이 외국 관광객이 상반기에 242만이 들어왔습니다. 인기가 기장이 핫플레이스입니다, 관광객이.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많이 정착할 수 있게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하여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동만 위원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정말 제가 기장을, 그때도 아셨겠지만……

○정동만 위원 잘 아시지요?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장 가 보니까 너무 변화가 많이 되어서 실제로 그 필요성은—자주는 모르겠지만—피부로 느끼겠다고 저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러니까 기장역 KTX-이음 증편 반드시 해야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기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기왕 위원 장관님 그리고 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정동만 위원님께서 지역과 관련된 여러 말씀 하셨는데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복기왕 위원 저도 충남 얘기 한 군데 하겠습니다.

당진-아산-천안 고속도로가 있는데 충남에는 당진·아산·천안이 사실 발전하고 있는 도시 중의 하나고 여기가 경제권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2010년도에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가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간구간 쪼아지면서 당진과 아산 구간은 2024년도에 이게 타당성재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애시당초 계획은 당진-천안이었는데 중간에 당진에서 아산까지는 여기는 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탈락시키는 것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의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도 그렇고 당진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으니까 이번 하반기에 재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복기왕 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뉴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이 많았는데요. 저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저도 그 안내문을 봤는데 사실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건 아니고 글자 크기는 똑같고 그런데 맨 첫 번째에 1.9~3.0이라는 게 고정금리라

는 이름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글자 크기의 그 첫 번째 칸 마지막에 기타 해서 변동될 수 있다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소비자 분들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복기왕 위원 그래서 원래의 뜻은 실제 당시의 윤석열 정부 청와대에서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1.9~3.0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이런 안을 홍보하려고 예시를 든 것인데 이것이 청년들 혹은 신혼부부가 볼 때는 고정금리처럼…… 2023년도에 어떻게 2030년도의 금리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만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혼란스럽다라고 하면 저는 국토부에서 책임지고 이런 혼란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비록 윤석열 정부 때 일이지만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 같은 의견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HUG 사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잠시만 좀 멈추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대책 가운데서 쪽 훑어보니까 공급 대책도 30년 착공, 사실 너무 멀어서 좀 헛갈리기도 하고 용산공원, 지금 현재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넓게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보니까 사실 다른 것들은 가려져 있고 그래서 찬찬히 보다 보니 요즘 우리가 공급도 부족하고 전세도 부족하고 월세도 부족하다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예.

○복기왕 위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집이 있는 분들이 월세를 통해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싶은데 마땅치가 않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또 세입자들, 그러니까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전세를 살고 싶은데 전세 물량은 점점 고갈되고 월세로 바뀌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아마 이런 상품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예.

○복기왕 위원 간략하게 한 30초 동안 그 사업에 대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공급에 묻혀 가지고 홍보가 안 돼요. 실제 서민들은 이 사업이 훨씬 더 중요하고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임차인이 저희 HUG에게 전세금을 맡기고 저희 HUG는 그 전세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서 월세 쪽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복기왕 위원 그러려면 임대인이나 혹은 임차인에게 새로운 제도가 그리고 안정적인 제도가 시행이 되고 우리가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우리 재정도 손실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 임대인에 대한 어떤 추가 인센티브나 임차인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지금 시장의 전월세 전환율이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한 4.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5%에 가깝게 내기 위해서

우선 이 신탁금을 가장 안정적이고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저희 PF 보증선언 사업장에 PF 대출을 하면 4~5%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다양한 인센티브, 특히 임대인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 구상하고 관계기관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소득세에 대한 일부 경감이라든지 또 주택연금 제도에 있어서 규제 지역의 경우에 예를 들면 서울의 주택연금을 받는 분이 지방으로 이주할 때는 연금도 받고 또 전세안심신탁도 이용할 수 있는 이중의 수익 구조를 저희들이 설계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특히 안심신탁전용 전세대출을 시중 은행권과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5% 내외의 지금 시장의 전월세 전환율에 육박하는 정도의 수익을 창출해서 임대인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기왕 위원**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그 피해자분들도 문제지만 이거에 따른 막대한 우리 재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되면 저는 공공이 운영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전월세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최대한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많이 하시고 전세사기 사고에 투입되는 재정 그 이상으로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재정 투입이 되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한테 묻은……

○**복기왕 위원** 아니, 최인호 사장님.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세금에 대한 임차인의 보호 또 급격한 월세 전환에 따르는 충격을 완화하고 특히 임대인에게는 공시를 2개월간에 걸쳐서 저희 HUG가 지급하는 걸 보장하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도 강구하고 있고요. 특히 전세신탁금이 쌓이게 되면 매입임대사업 등에도 공급할 수 있어서 또 공공주택임대 비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기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 1차관님, 비거주 1주택 통계를 가지고 있다, 없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추정하는 통계는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제가 파이낸셜뉴스 포함해서 몇

가지, 국가데이터처 그 자료에 근거해서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저는 아까 말씀 제가 들었을 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냥 대략적 데이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데 비거주 주택 통계를 국토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좀 내부적으로 저는 정책 전반, 이 정책 포함해서…… 국토부가 큰 틀의 정책들을 만들어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이거든요. 저는 경기도에 제가 부지사로 있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국토부 차관 포함해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저희가 주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강득구 위원 두 번째, 이 대상자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분노 그리고 정책에 대한 공감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 해 봤냐고 했을 때 여론조사 지금 아직 안 해 봤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 자녀 진학, 돌봄, 양육, 부모 부양, 질병 치료 등 여섯 가지 예외조항을 뒀는데 실제로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의 간다. 그렇지만 이것 말고도 제가 이것과 관련된 댓글들, 자료들 보면 수십 가지가 되더라고요. 이런 댓글 포함해서 이런 예외적 상황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나요, 하시지 않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비거주 주택자에 대한 과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강득구 위원 그런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그 과세에 대한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세제개편 관련해서……

○강득구 위원 차관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보다는 기재부나 예를 들면 부처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보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토부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까 총리실 차원에서 좀 더 격상해서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함께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기재부와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강득구 위원 장관님, 어쨌거나 지금 공급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서울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국민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도시에 좋은 입지가 없다, 그러니까 공급할 땅이 부족하다 이게 가장 고민 아닌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정부가 올해 1월 달에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강득구 위원 그런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녹지 보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용산공원의 주택공급이 공원 보존과 대립되는 개념입니까? 공원 보존할래, 아니면 주택 지을래, 확보할래 양자택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같이 공존의 문제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희는 공존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은 계속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택을 포기해야 된다 이 프레임으로 국민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보담당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변인실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이 용산공원 관련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득구 위원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저희는 물론 장외에서 서울시장을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내일 미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진행한 후에 논쟁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나 정부나 장관님 포함해서 공원, 주거, 생활SOC 이게 궁극적인 방향과 지향점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렇게 설득하고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잠시 회의를 정회했다가 오후 3시 4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할 건데요.

오후 이어지는 회의 시간에 질의하실 순서는, 추가질의 순서는 김미애 위원님이 첫 번째고 그다음이 김은혜 위원님 그다음이 문정복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의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장관님, 고생 참 많으십니다. 그래도 힘내서 우리 국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수차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뉴홈 관련해서 다시 한번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전청약 모집 공고문에 보면 고정금리 40년 지가 80% 지원, 네 번째, 기타에 보면 지원 대상 금리 등은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 소비자인 청약자 입장에서 보면 위에 있는 내용을 신뢰합니다, 고정금리 40년. 그리고 이것은 나눔형인데 선택형을 봐도 마찬가지로요. 선택형은 사전청약 공고문과 당시 국토부 보도자료 2개를 합치면 똑같아요. 선택형도 '6년 후 분양 선택 시점에는 40년 만기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 동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약관과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약관규제법에 봐도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이다 또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은 고객에게, 즉 사전 청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된다. 그리고 문언 해석의 원칙은 표시된 대로예요, 표시주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리적으로 어느 모로 보나 이것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과거에 문제인 정부 때도 신혼희망타운이 유사했어요. 그때도 고정금리 1.4%였다가 후에 변경하려고 했다가 원희룡 장관 시절에 맞다고, '국가가 국민께 신뢰를 드렸으니까 신뢰를 보호해야 됩니다' 해서 당시 공고문대로 이행을 한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25일 만나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신뢰를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 지금 정책이주지라고 있습니다. 전국에 47개가 있는데 우리 지역이 4개고 그중에 면적이 가장 넓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과거의 도시 빈민들이 철거해서 강제 이주돼서 집단 이주지를 형성했는데 이곳이 도시재생을 한다, 뭘 한다 해서 주거환경을 아무리 개선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7·9·11평 이걸로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성남시가 주로 순환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정책이주지 지원법을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미애 위원** 거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애 위원** 그리고 하나만 추가하면 아까 정동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장관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려야 돼요. KTX-이음을 센텀역으로 정해 주셨는데 똑같이 상하행 각 한 번만 정차를 하다 보니까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요.

이것 역시 그만큼 이용객이 많다는 거니까 증차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위원 저도 지역 민원 억수로 쌓여 있는데, 장관님 용산공원부터 먼저 좀 해결 하겠습니까.

장관님, 용산공원 녹지 기능이 상실된 곳에 주택을 짓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구 방사청 건물, 군인 아파트, 장교 숙소를 예로 드셨는데요.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 제가 조금 의아해서 지도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말씀하신 기존 미군 숙소를 위아래로 제가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를 녹지로,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현재 용산공원법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위에 구 방사청 또 군인 아파트 또 아래에 있는 장교 숙소 이게 본체 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 외 용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현재 용산공원법 취지에는 정면 배치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런데 이 세 군데가 토양오염이 정화된 상태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 야당 시절에 토양오염을 이유로 단순 임시 개방도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국민과 어린이들을 위해하는 것이라고요. 또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는 여기 지금 앞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 용산공원 토양오염이 걱정된다고 개방을 반대하는 특별법안을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년들에게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거지요. 정권이 바뀌면 땅의 오염 성분도 바뀌는 건가? 장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오염 정화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혜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오염 정화를 한다 그러면 정비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수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환경단체에서는 최대 1조 원까지 추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은 미국이 책임져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면 장관님,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비용은 미국이 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입주자가 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 세금으로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 책임 소재가 저는 아직까지 미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미국이 책임지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면 미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신 적 있으세요, 논의에 들어

가시거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용산공원 부지 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가 주체가 아니고 국방부가 주체입니다. 그래서 국방부한테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아직 논의가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언제 될지 모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환경 측면에서나 아니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용산공원은 국가공원, 즉 녹지로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가공원에 대한 과거 역대 정부가 이루어 왔던 철학도, 실현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정책은 전면 백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고, 청년들에 대한 걱정을 페버스도 들었고요 그리고 고시원 옥조 집어넣는 것도 들었는데 청년들이 그것 하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이번에 용산공원 주택도 청년들이 하라라는 의견을 먼저 준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청년들이 의견을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은혜 위원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해서 시장이 원하는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세훈 시장과 만나셔서 건설적이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공급 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장관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용산공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녹지를 손대지 않는, 이미 녹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저희는 주요한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오염을 제거하는 게 그 시작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정 또한 전면 백지화에서부터 상당한 비녹지 공간에 대한 청년주택으로서의 적극적 개발, 미니멈·맥시멈 놓고 최선을 다해서 숙의 과정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PPT에 띄워지는 저 내용을 보면 2025년도 매각 중단 공동주택 용지 목록이네요. 대략 수도권만 보면 10개 지구에 18개 필지, 대략 41.6만㎡인데 이것 매각 중지한 이유는 전부 통합 공공임대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원칙이 그렇습니다.

○문정복 위원 원칙이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문정복 위원 이 문제 하나, 규모가 이렇다는 것 짚고.

3기 신도시 마지막에 책정된 시흥·광명 신도시 아시지요? 대략 380만 평 규모의 분당급 신도시 규모잖아요. 시흥·광명 택지지구의 변경된 토지 이용계획을 보고 제가 깜짝

늘렸습니다. 저희하고 아무런 논의도 없이 대략 임대주택 비율을 60% 가까이 늘렸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분양 전환 임대주택조차도 분양 전환 없는 임대주택으로 대부분 바뀌었다고요. 이렇게 하면 사실상 지방정부 파산하라는 의미거든요.

실제로 시흥시 같은 경우, 광명시 같은 경우 지난 코로나 정국을 맞으면서 코로나 대응 비용이 원체 컸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취득세 이런 세수가 거의 원천 차단됐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시흥·광명 신도시에 들어가는 SOC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이것을 통합공공임대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방정부에 대한 배려를 정말 0.001%도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1차관계 지난번 현안질의 때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전체적인 SOC,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SOC 또는 지방정부가 하는 SOC…… 지방정부가 하는 SOC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분야별로. 그리고 준공 이후에 지자체로 이관했을 경우에 운영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여쭙봤더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주택공급본부장한테 저희 방에 와서 설명을 좀 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시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국토부에 전혀 계획이 없더라고요. 설계 자체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장관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장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구체적인 답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구체적인 안은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하고 논의를 이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꼭 오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때리기가 수위를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때릴수록 분노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는 강남 부자 때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톡톡한 한 채, 이게 거의 지금 악마화가 되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비거주 1주택자를 정말 투기세력으로 보십니까? 투기세력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투기자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취하겠다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실거주를 못 하는 이유가 여럿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현실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사실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또는 지방·해외 발령, 부모 봉양 등등이 많고 특히나 은퇴 노령자는 요즘 자가를 세우고 오히려 더 저렴한 전세살이, 월세살이를 하면서 그 차액으로 노후의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세제개편이긴 하지만 종부세 공제도 줄이고 또 양도세 보유공제도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에 8·13대책을 내놨는데요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전세자금 대출 완전히 묶는 겁니다.

전세자금을 완전히 이렇게 묶어 버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인데, 그렇다면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들에 내년 2027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될 테니 뭘 내놨냐 하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 번만이라도 자가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면 규제에서 우리가 빼 주겠다, 배제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하루만 있어도 주민등록을 등록해도 되는 겁니까? 이 얘기는 들으셨지요?

올해 안에 주민등록을 한 번이라도 자기 집에 두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그러면 사는 걸로, 거주한 걸로 간주해 주겠다 이러는데 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거주해야 됩니까? 하루만 거주해도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주택실장이 답을 하도록……

○김정재 위원 담당자 답해 주세요.

차관님이나 담당자, 얼마나 거주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영국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금융에서 하루라도 거주하고 있으면 한 걸로 그렇게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단 하루만 살아도 거주로 된다, 이것 위장전입을 조장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상한 정책 내놓고 ‘주소 하루만 옮겨도 거기에 산 것으로 간주 할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위장전입 조장하는 거예요. 다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가지 예외조항을 아까 부모 봉양, 주소 이전, 자녀 교육 등등을 뒀는데요. 은행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복불복 대출입니다. 이것도 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피셔야 됩니다.

전세대출, 굉장히 이걸 바라고 있어요. 이 중에, 뒤에 계신 분 중에 대출 안 끼고 집 사신 분 몇 명이나 되십니까? 되신다 그러면 잘 태어나신 거지요. 금수저 중의 금수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 한번 꼭 다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1호 과제가 혹시 장관님, 뭘지 아시지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인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공공기관 이전 문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곧 공청회라든가 또 노조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 또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전혀, 저희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돼 있는 것 같아요, 자료 요구해도 별다른 그것도 없고 또 업무보고에도 보면 한두 줄 나와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제기되는, 우려되는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등등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것 느끼지만 너무 밀실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투명한…… 어차피 한 번은 맞아야 될 그럴 사항이니까 좀 더 투명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회하고도 필요하면 최대한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리고 결산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어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보니까 국토교통부 예산 집행률은 95% 정도 돼 가지고 상당히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당수 SOC 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제로인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제가 철도 관련된 것 보니까 21개 사업 가운데서 5개 사업이 집행률이 제로더라고요. 그렇지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편성 되었다 그런 것 같으면 다 집행되고 곧 건설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년 동안 그냥 종이쪽지에만 적혀져 있고 지역민들한테는 희망고문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의 집행률을 높여야 되겠다.

물론 두 가지 이유 아닙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 했거나, 국토부가. 아니면 또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하는 그 두 가지 요인 중 하나라고 보니까 하여튼 앞으로 편성된 예산은 거의 100% 아주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것 같으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관리 좀 잘해 줘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내가 철도를 짚은 이유는, 사실 철도의 오지가 경남입니다. 경남이 잘 아시겠지만 인구라든지 산업 규모라든지 등등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매우 کم에도 불구하고 철도만큼은 가장 오지인 그런 지역이 경남이에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5차 철도망 건설계획 추진 중에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경남 지역이 철도의 오지로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의 현안, 특히 동대구·창원·가덕도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와 그리고 CTX-진해선, CTX-창원선 또 사천 우주항공선,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높게 검토해 가지고 5차 철도망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요. 실제 저희 국토부 집행

률에서 철도 문제 5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측할 수 있는 준비에 대해서 절차도 강화하고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철도 교통의 오지가 경남, 지금 현재 서울에서 고속철도로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은 경남 창원·진주밖에 없다 하는 걸 갖다가 장관님 한번 다시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안태준 위원** 장관님, 2기 신도시 아직 미준공된 곳이 몇 개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안태준 위원** 파주 운정, 동탄2, 양주, 검단,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미매각 용지들이 제법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안태준 위원** 이번에도 그 대책 중에 이 미매각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안태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모경중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나 학교 문제가 걸리는데 학교 문제는 항상 걸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 문제는 기존의 지자체나 광역에서 쓰고 있는 학생 유발률 모델 자체하고 실제로 신도시에 오는…… 우리가 신혼부부 특공이나 다자녀 특공 그다음에 신축을 선호하는 것 때문에 지난 통계가 아마 1.52배 정도 훨씬 많은 걸로 아는데, 또 교육 부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도시가 보통 5~8년 정도 초등학교 피크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지나고 나면 또 급속도로 빠져서 중고등학교로 옮겨 가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청년주택을 하더라도……

지금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시작한 지가 제법 꽤 됐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곳도 있고 제가 말한 미준공지가 대부분 2015년부터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다 준공이 되는 곳들인데 이런 곳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도 많이 얘기는 하는데 2기는 사실은 좀 더 쉽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3기 신도시마저도 지자체하고 협의를 할 때 사실 우리 국토부가 지자체가 갖고 있는 기반시설 물량, 그러니까 소위 하수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잖아요, 절대 안 알려 주니까. 그런데 그쪽하고는 결국은 다 재정 문제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물량들을 좀 더 활용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 차관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주택을 많이 분양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데서도 조금 걱정을 했듯이 결국은 공공이 다 할 수는 없다, 민간 부분을 어떻게든 우리가 추동을 해내야 되는데 이번에 수도권심의위에서는 민간 부분을 상당히 많이 빼셨더라고요. 뒤로 다 밀어 버리고 공공을 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민간도 포함돼 있습니다.

○안태준 위원 민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지역을 포함한 동부권은 다 상당히 많이 미룬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내년으로 다 미뤘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8월 말에 예정돼 있었잖아요, 수도권심의위가.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수도권정책심의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안태준 위원 예.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이번 8월에도 있고요 그리고 10월에 또 있습니다.

○안태준 위원 10월에 또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또 있습니다.

○안태준 위원 제가 소위 민원 접수를 한 것에 따르면,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공공은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됐지만 기왕에 민간도 하려고 하고 있으면, 물론 그건 심사를 잘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심의 자체를 뒤로 미뤘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도시개발사업이 민간 사업이고 그 도시개발사업의 허가권자는 지자체장입니다. 지자체장하고 저희 국토부의 수도권 심의하는 국토국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범 위원 신성범입니다.

장관님, 들어 보세요.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을 들어 보시기는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신성범 위원 들어 봤지요, 전북이시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신성범 위원 말 그대로 산악벽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매우 가파른 산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전기열차를 만들겠다 해서 이게 국가 R&D 사업으로 됐고 지금까지 2020년부터 예산이 많이 투입됐어요. 얼마 투입됐느냐? 지금 한 223억 정도 투입됐어요, 해마다 계속.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표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예산이 저 정도 많이 투입됐다.

그래서 궁금한 게…… 심지어는 이게 2017년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후보의 전북지역 공약이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건립이었어요. 그래서 국정과제가 됐어요, 국정과제. 그래서 예산이 태워진 거예요. 예산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저게 정부에서 사업을 한다니까 남원, 울릉, 태백 다 한번 해 보겠다 그랬어요,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남원시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는데 결론은 땡, 땡, 사업이 안 된 거예요. 왜? 한번 보세요.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요.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 지리산 산악열차가 웬 말이나’ 나온 거예요. 웬 말이나, 웬 말이나, 그래서 2025년도에 아웃됐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223억 들여서 뭘 했는지가…… 차량을 만든 건지 연구를 했는지 장관님 모르실 테고 철도공단 나중에 한번 보고를 받아 보세요, 제가 답변 요구 안 할 테니까.

기술은 개발되었다 칩시다. 어찌 됐는지를 아무도 몰라, 사업은.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남원만 시범사업을 하다가 저리됐으니 산악벽지 전기열차 사업은 폐기되는 거냐, 재추진되는 거냐? 그러면 재추진되지 않는다면 돈을 250억 가까이 들여 만든 기술 활용방안은 무엇이나.

또한 지리산은 남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에 산청·함양·하동·구례, 3개 도, 경남·전남·전북 3개 도에, 이 5개 시군이 지리산을 둘러싸고 있다고. 그러면 남원에서 이게 안 됐으면 다른 시군에서 자기들이 한번 이 기술로 지역 소멸도 극복해 보고 관광자원도 개발하겠다면요 요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장관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실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전라북도 남원 문제라 제가 이 속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실제 이 문제는 원래 환경단체의 반발 때문에 무산된 게 아니고……

○신성범 위원 그게 그거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전라북도와 남원시의 이견 차이로 해서 문제가 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 그러니까 도로가 나 있는 지역에 차가 다니지 않는 걸 미래에는 전제해서 산악열차가 다닌다면 오히려 환경에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현재 이 기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성범 위원 재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재추진한다가 아니고요, 재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서 좀 더 세부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보고를 한번 받아 보시고 아니면 적어도 남원에서는 포기한 거면, 남원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요청해서 이 기술을 이전해 달라든지 아니면 활용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복안을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전라북도하고 남원하고 다시 한번 제가 논의를 마무리한 후에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국가철도공단한테 보고를 면밀히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장관님, 본질의 이어서 여기도 뉴홈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에 신희희망타운으로 해서 타운 문제로 사실 시끄러웠던 거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결국은 1.3%의 고정금리 이 부분을 1.9%로 올렸다가 다시 청약 시 금리로 복귀시켜 준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희희망타운은 지금 나눔형 뉴홈과 같이 공급계약이라든지 시세차익의 공유 또는 전용 모지기,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출 시’라고 자꾸 주장을 하지만 ‘청약 시’ 기준으로 정부가 청약자들에 대해서 준 신뢰를 지킨다는 그 전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요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뉴홈으로 사전청약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지요? 8018명입니다. 8000명의 이삼십대 젊은이들이 거기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한번 보시지요. 젊은이들 사전청약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요. 제가 232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월소득 상한이 234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소득을 가진 청년들이나 신희희망이 과연 정상적인 형태로, 일반분양 형태로 집을 한다면 집 분양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에게는 이것이 본인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만기와 이자라는 전용 모기지에 대한 신뢰가 컸던 거지요. 마지막 기회니까, 자기들이.

그런데 지금 보이시지요? 디딤돌 대출로 전환하고 30년으로 바뀌면요 234만 원의 수입을 받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107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이자를 50%를 더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사실상 이 집을 살 희망을 없애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마곡엠밸리 17단지 입주자 지정일이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8월 28일. 장관님, 이거 잔금 납부 유예나 입주지정기간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금리 결정도 못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리와 만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정 시점에 대해서 날짜를 줘야지 결국은 장관님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그 답변을 지금 보는 수많은 뉴홈의 청년들이 신뢰할 거 아닙니까. 이것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다음 주에 미팅이 잡혀 있으니까요, 거기서 마무리 지을 생각이구요. 현재 이 문제……

○유상범 위원 그때는 답변을 주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이견이 없이 현재 저희 국토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납득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울산 북구의 진보당 윤종오 위원입니다.

제가 구광 현장의 여러 꿈수로 표준계약서를 무력화한다는 제보를 받고 기자회견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박재순 교통물류실장께서 직접 현장까지 가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책임 있게 관리감독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오늘 아까 폭염에 대해서 제가 앞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구광 현장에서 8월에만 세 분 정도가 쓰러졌었거든요. 그런데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여기 지금 온도 한번 보시면 물류센터나 이쪽에 거의 30도 후반, 40도 초반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구광 같은 경우는 폭염 시에 옥외작업을 하지 말라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냈으면 작업이 일정 정도 중단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송 마감시간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소비자들한테는 2시간 더 늦게 주문을 하셔도 배송시간은 똑같이 한다. 이렇게 했으면 배송 마감시간도 2시간을 늦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폭염에 대한 준비나 조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적 합의 과정에 있는데 미합의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법제화되거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가능하면 표준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어쨌든 현장 감시활동을 지금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강화하고 있거든요. 더 많이 해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하여튼 종사자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과로사 막기 위해 가지고 사회적 합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특히 쿠팡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조금 더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

하나 더, 이건 다른 부분인데요. 남양주 7300만 원, 일산 서구 4800만 원, 수원 영통 4900만 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CJ대한통운에 있는 대리점이 돈 떼먹고 우리 기사들한테 돈을 안 준 금액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노동자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임금채권보장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청, 영업점,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체불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보증금은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그런가 봐요. 몇천만 원 떼먹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CJ는 돈 다 챙겨 가고 지금 대리점에 있는 기사들은 돈을 못 받아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난리입니다.

사실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임금 지급 못 하면 원청이 연대책임을 진다든지 또 지금 공공발주 같은 경우는 직접 지급하는 것도 이미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또 장관께서 SNS에 폭염 대책도 강조하셔서 쓰셨는데 얼마 전 업무보고 때는 폭설 대책은 있는데 폭염 대책은 없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제가 지적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최인호 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근생빌라, 근생시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시지요? 이번에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 근생빌라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만 1527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전세사기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허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생빌라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12월부터 특정건축물양성화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 혹은 근생 허가 등이 양성화되면서 대상 건축물의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30일 이내에 만약에 많은 지자체의 서류 검토라든지 건축위원회 심의가 가중될 경우엔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요.

반환보증 자체가 계약기간 2분의 1 이상이 도과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제도 취지를 살려서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심도 깊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첫 시행이니 만큼 30일 이내에 조금 지체되거나 또 제도적인 홍보가 조금 부족하거나 이분들이 준비하는 데 미흡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그런데 반환보증 소위 가입 조건, 지원 조건은 또 2분의 1 도과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서울역과 청량리역, 민자역사 벌써 거의 20년 넘어가고 있는,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벌써 20여 년 넘어가고 있는, 거의 다 돼 가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철도시설 점용허가 제도를 30년에서 최대 50년으로 연장을 했어요.

원래는 점용 만료 후에 연장하는 구조였는데 50년으로 연장을 했는데, 매출 대비 점용료의 변화를 보면 서울역은 22년 매출 264억에서 25년 444억으로 68.2% 증가했고 청량리역은 511억에서 726억으로 42.1% 증가했는데 점용료의 증가는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두 민자역사를 아주 큰 대기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용료에 대한 현실화 또 혹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잘 수용해야 되겠고요. 점용료도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되겠고 또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영업료가 증가하는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재산료에 너무 치중해서,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산공원 문제는 장관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곡이, 좀 오해가 있어 가지고 그걸 풀어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종이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용산공원 지키자 쉼기대회’ 해 가지고 용산어린이정원 앞에 모인다는데 국민의힘 용산당협 시·구 의원들이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자꾸 이게 왜곡되면 대통령이나 정부나 우리 당에도 부담이 되잖아요, 좋은 뜻으로 하신 건데. 그래서 이름, 네이밍 이런 게 중요한데 용산공원보다는 용산공원 일부 훼손지역을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일영 위원 그래서 공원 기능은 유지를 하고 훼손된 녹지, 공원, 그런 지역 일부 개발하는 것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서 그걸 잘 정리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속도가 중요합니다, 착공의 속도.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는 용산공원 일부 지역이든 좀 세게 추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물우물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강하게 추진해 주시면 그만큼 우리 주택 문제가, 집값 문제가 해결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부실·하자 시공 이런 것은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SK에서 지은 송도의 렉스 오션 거기 사조위가 이번 주 내에 구성이 완료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하여튼 주민들 걱정, 두려움이 많은데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SK도 성실하게 주민과의 대화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도로국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그리고 GTX-B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도권에 GTX-A·B·C가 다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건설 완공돼서 개통되면 꼭 서울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집값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여의도까지 오는 데 1시간 반 안팎 걸리는데 GTX가 개통되면 23~28분,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8분, 굳이 서울 안 살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31년 완공 문제없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일영 위원 공정률 몇 %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7.5%입니다.

○정일영 위원 차질 없나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예, 계획보다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요, 잘해 주시고요.

도로국장님, 아까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시작했다고 그랬나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효정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그게 노선은 어디로 해서 타당성을 시작하신 거예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효정 예타 노선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대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타당성조사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일영 위원 기본적으로 예타 노선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효정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게 기본안입니다.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효정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성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

십시오.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용산공원 관련해서는 용산공원 내에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 이런 부분들을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해 보자, 그리고 이것을 공론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강득구 위원 그게 정확한 거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강득구 위원 저는 이것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일관되게 녹지를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데 이게 이분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법, 이거나 저거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협의하면 저는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주택 공급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의 첫 번째 원칙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위원님, 오히려 제가 받아들일 때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오직, 유일 이런 식의 주장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득구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재건축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좋다, 그리고 공공에 대한 재개발 그리고 이렇게 용산공원처럼 새로운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렇게 다각도로 검토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 이것을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MB 정권 때 내곡동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때 보금자리를 만든 것, 그때 그 당시에 서울시장 입장에서 허가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강득구 위원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강득구 위원 그런 절실함들을…… 아니, 그러면 대체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찾아보든지, 그런데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강득구 위원 그리고 그 전제하에서, 용산공원 토지를 활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부탁을 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분양하지 않고 청년·신혼부부·장기무주택자 이런 분들한테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큰 틀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두 번째, 그냥 몇 년 살다 나가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자격을 유지하면 한 30년, 40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아이도 키우고 직장을 안정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 모델의 하나의 사례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것까지 고민…… 그래서 우리가 임대주택 하면 상대적으로 몇 년 살다 나가고 이런 좀 부정적인 시선이 있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벗어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주거복지 차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주거의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드는 그런 큰 틀의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편형 공공임대라고 하는 방식을 만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비거주 1주택 세제 개편을 계속 얘기했는데 주택 가격 안정이나 전월세 가격 안정이나, 이 두 개를 동시에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월세 가격 안정이라는 입장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 위원입니다.

장관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핵심 로드맵 일정을 보면 계획 확정인 2026년도 정부 업무보고에서 확정을 추진하고 2027년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한다. 대상 규모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약 500개 전수조사 후에 최종 발표 예정, 추진 배경은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 지역균형 발전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엄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만 추진하면 1차 이전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 그렇게 지적해 왔고 이와 관련된 법안 개정안까지 대표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엄태영 위원 그런데 장관께서는 지난 14일 날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혁신도시 이전

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수많은 문제 제기와 부작용들을 지적해 왔고 또 여러 용역을 통해서도 그게 나타났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신 건지 아니면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최근에 보면 대구·부산·울산·대전, 광역도시들도 집단으로 유치 경쟁을 하고 난리입니다.

저는 이것이 대도시에 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광역도시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지방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 국토 전체적인 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또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나눠 주기식은 저도 반대입니다마는 그 기관의 성격이나 지역 산학과의 연관성·시너지 그리고 인구 소멸 위기 정도 또 구도심의 재생 효과 등 종합적으로 따져서 가장 파급력 있는 곳에다가 제대로 꽂아 넣자, 이게 저의 생각이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도 공감대를 이룬 것입니다. 혁신도시냐 아니냐 이런 낡은 잣대로 선을 긋고 벽을 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국가균형발전 핵심이 이전 효과의 집적이라면 어디로 가야 가장 큰 균형발전의 마중물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서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따로 연구와 기관에 대해서 별도의 재편성과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2차 이전도 1차와 똑같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거듭 드리고요. 2차 이전의 평가 기준이 인구 감소 지역, 지역 산업 연계성, 기존 도시 활성화 효과 이런 데 반드시 실질적으로 효과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발표되는 대로 의원실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또 제가 점검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두 가지 사안만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뉴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조금 전 복기왕 간사께서도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달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정동만 간사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 사안이 어느 정부의 책임이냐, 공고문의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를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 온 분들의 삶 그리고 내 집 마련 계획에 걸려 있는 기대 이런 것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피해자분들께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준비해서 미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야 간사와 위원장까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만큼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그리고 LH 사장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요 몇 년 사이에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사업 현장의 공사비가 매우 크게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상승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위기에 놓인 곳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LH가 참여하는 사업들도 그런 사업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LH의 핵심 가치라는 게 국민의 편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관습과 관행에서 벗어난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처럼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있고 또 주민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그런데 불가피한 공사비 상승에도 과거 감정평가액이나 계약 당시 기준만으로 적용해서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사업은 이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원칙과 기준은 필요하지만 사업 여건이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비나 사업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의동** LH가 개별 사업의 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곳은 보다 유연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엄태영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오랜 시간 동안 답변에 임해 주신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의원실 보좌직원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 위원(27인)

강득구 김남근 김미애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모경중 문정복 복기왕 부승찬
 신성범 안태준 엄태영 엄태영 유상범 유의동 윤종균 윤종오 장경태 장종태
 전용기 정동만 정일영 정희용 조인철 허영 황운하

○출장 위원(2인)

강대식 이용선

○청가 위원(1인)

황희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오세일

입법심의관 이유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1차관 김이탁

2차관 홍지선

기획조정실장 김현정

국토도시실장 정의경

주택토지실장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정우진

교통물류실장 박재순

항공정책실장 정채교

건설정책국장 김석기

모빌리티자동차국장 박준형

도로국장 김효정

철도국장 김태병

재정담당관 허경민

정책기획관 이주열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단장 성호철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김영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상임위원 박지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기획조정관 박상욱

새만금개발청

청장 문성요

기획조정관 정인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성훈

한국도로공사

사장 유정훈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태승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김범호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박재희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현욱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최인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

국가철도공단

사장직무대행 이안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언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어명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

주식회사에스알

대표이사 정왕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원장 하대성

【보고사항】

○의안 회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0.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9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0.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9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0.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98)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0.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99)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0.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0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0.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0.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0.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0. 복기왕 의원·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2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0.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3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0.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37)

이상 11건 7월 29일 회부됨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9. 김남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9. 김남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9. 윤종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0)

이상 3건 7월 30일 회부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1.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4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1.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62)

이상 2건 8월 3일 회부됨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3.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76)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3.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7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3.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7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3.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86)

이상 4건 8월 4일 회부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5.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4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5.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5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5.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6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5. 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67)

이상 4건 8월 6일 회부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7.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9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7.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93)

이상 2건 8월 10일 회부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0. 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7)

8월 11일 회부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1.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1)

8월 12일 회부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2. 김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5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2. 김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5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2.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60)

이상 3건 8월 13일 회부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3.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3.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66)

이상 2건 8월 14일 회부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4.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8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4.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4.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9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4.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0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4.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04)

이상 5건 8월 1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0.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32)

7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0.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33)

7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6. 7. 31.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55)

8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4. 김전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1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4.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2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8. 4.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32)

이상 3건 8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0.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2)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8. 10. 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0)

이상 2건 8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2. 김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53)

8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